

# 주간 통일정세

2015-20

## Contents

###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현영철 숙청 공개 남한 또 격렬하게 비난(5/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전국연합근로단체 대변인은 18일 담화를 통해 “박근혜의 구린내 나는 악담질이 온 겨레를 크게 격노케 하고 있다”며 “아무리 동족을 헐뜯어대고 비방해도 정도가 있는 법”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함.
  - 대변인은 “동족 대결에 얼마나 환장이 되었는지 그 누구의 ‘도발적 행동’을 용인할 수 없다느니, ‘극도의 공포정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느니 하는 악담까지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다”고 말함.
  - 그는 또 “요즘에는 박근혜가 그 무슨 ‘체제의 불안정’으로 우리가 ‘곧 허물어질 것’이라는 몽유병 환자의 개꿈 같은 망발을 늘어놓는다”고 포문을 열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박근혜 대통령을 헐담함.
  
- 북한, 박대통령 ‘상봉축구’ 발언 비난…“길부터 터라”(5/21, 연합뉴스)
  -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는 21일 대변인 담화에서 “인도주의라는 말을 염불처럼 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동족끼리 오갈수 있는 길부터 터놓는 것이 박근혜 패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대변인은 여당을 함께 거론하며 “상봉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그 무엇을 할 것처럼 입방아질만 하고 북남 사이의 모든 접촉과 왕래의 길을 가로막으면서도 그 누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운운하며” 대결분위기만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함.
  - 대변인은 “괴뢰패당은 그 어떤 요설로써도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파탄시킨 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숭고한 인도적 문제까지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는 자들은 천벌을 면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천안함 사건 공동조사 제안…5·24 해제 촉구(5/24, 연합뉴스)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24일 성명을 통해 “5·24 조치는 날조된 천안호

- 침몰사건을 등대고 꾸며낸 대결조치이며 부당한 근거에 기초한 결과는 부당하기 마련”이라며 이렇게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국방위는 “만약 천안호 침몰사건이 우리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온 민족 앞에서, 세계 앞에서 내놓고 공동으로 조사해보자는 우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함.
  - 국방위는 “더욱이 두동강 난 천안호의 선체를 땅위에 올려놓은 것만큼 진상조사는 한결 더 수월할 것”이라며 “공동조사에 동원될 국방위원회의 검열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임.
  - 북한은 이어 “5·24 조치는 력사의 오물통에 처넣어야 할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남측은 “선대화 후해제”라는 잡꼬대 같은 낚두리를 쫓아대며 시간을 허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함..
  - 국방위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존중한다면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5·24 조치’와 결별하는 용단을 내야 한다”고 촉구함.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연일 대남 비방전…“공포정치 운운은 도발”(5/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민족의 재앙거리, 북남 관계개선의 암덩어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괴뢰 집권자가 그 누구의 인권 문제를 운운하며 공포정치니 뭐니 하고 악담을 늘어놓는 것은 천주에 용납 못 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비단보자기로 저들의 인권 실태를 가리워보려고 해도 시궁창의 구정물에서 풍기는 악취가 어디 가겠냐”며 “그 주제에 감히 누구의 ‘인권’ 문제를 입에 올리었으니 세상을 웃기는 정치만화가 아닐 수 없다”고 비꼬았음.
  - 북한은 또 “병진노선을 관철하는 것에 자위력 강화의 길이 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와 존엄, 통일과 번영이 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 남한 정부의 비극이라고 주장하기도 함.
  - 신문은 “(지금)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할 엄숙한 시각”이라며 “괴뢰집권자는 자신의 행실을 심각히 돌이켜보아야 한다”고 역설함.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남북 경제 관계

- 북한 “남한 당국이 개성공단 파탄시키려 한다” (5/2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0일 “괴뢰 당국이 개성공업지구 노임문제와 관련한 부당한 입장을 고집하고 입주기업을 노골적으로 압박해 나선 것은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끝끝내 파탄시키려는 고의적 책동”이라고 주장함.
  - 매체는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개성공업지구의 노임 수준을 공업지구의 형편과 국제특구들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법제권 행사”라며 남한 정부가 임금 인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은 이어 “개성공업지구는 우리가 남측 기업가들과 하는 경제특구”라고 규정하고 “괴뢰 당국이 그 노임문제까지 쥐락펴락하며 개입해나설 하등의 리유와 구실도 없다”고 역지를 부림.
- 개성공단 임금문제 티결...별도 합의 전까지 기존대로(5/22, 연합뉴스)
  - 통일부는 22일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가 개성공단 임금문제와 관련한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노임을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3월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했음.
  - 통일부는 확인서의 ‘기존 기준’이란 “북한의 노동규정 개정 전의 기준인 ‘최저임금 70.355달러,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를 의미한다”고 설명함.

- 통일부는 “이번 확인서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뉴스는 덧붙임.

## 바. 남북 사회 관계

- 남북협력기금 10억원 北 장애인 지원에 쓴다(5/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정부가 제27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북한 장애인 지원사업 등에 106억4천만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고 보도함.
  - 이어 치료재활물품과 영양식 및 영양제 제공 등 국내외 민간단체의 북한 장애인 지원에 남북협력기금 10억원을 지출하기로 했다고 전함.
  - 통일부는 “이번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결로 이산가족과 북한 장애인, 영유아, 산모의 인도적 상황이 개선되고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가 개설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뉴스는 덧붙임.
- ‘6·15공동행사’ 준비접촉 다시 제안…북한 ‘묵묵부답’ (5/20, 연합뉴스)
  -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지난 18일 북측 준비위에 그쪽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접촉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그는 “이제 이들이 지난 상황인 만큼 대답을 기다려 볼 것”이라며 “행사가 예정된 6월 중순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행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무산을 이야기할 시점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함.
  - 그는 “이제 이들이 지난 상황인 만큼 대답을 기다려 볼 것”이라며 “행사가 예정된 6월 중순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행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무산을 이야기할 시점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함.
  - 이후 준비위는 19~20일 6·15 공동 행사의 실무 협의를 위해 개성에서 만나자고 지난 14일 제안했지만, 북측이 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접촉이 무산된 상황이라고 뉴스는 덧붙임.

- '5·18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을 맞아 '광주인민봉기는 군부파쇼독재 통치를 끝장내고 자주·민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피어린 애국투쟁이었다'며 '남조선 인민들은 광주항쟁 용사들의 넋을 이어 파쇼독재통치를 끝장내고 민주 새 세상을 안아와야 할 것'이라고 선동(5.18, 중앙통신·노동신문)
- 대통령의 '현영철 숙청·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 등 관련 對北 비판(공포정치·체제불안정, 도발적 행동 등)에 대해 '실명거론 원색적' 비난(5.20, 평양방송사)
- 「조평통」 대변인 성명(5.24), SLBM 시험발사에 대한 대통령 등의 발언(예측불가능성 대비, 유엔결의 위반 등) 관련 '핵억제력 강화에 도전해 나서는 자들은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5.24,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예비군 총기사건 관련 '내국동 한 훈련장에서 일병이 함께 있던 사병들을 향해 총을 쏘아대고 목숨을 끊는 사건 발생'으로 허위 보도(5.24, 중앙방송)
- 최근 대통령의 이산가족상봉 발언을 비난하며 이산가족들이 못 만나고 있는 것은 "괴뢰패당의 반민족적 망동 때문"이라며 '남조선 괴뢰들은 이산가족상봉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은 최악의 대가를 반드시 치뤄야 한다'고 주장(5.24, 중앙통신·노동신문)
- 대통령의 '北 인권' 발언 관련 최근 '세월호 추모집회' 진압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한 독재통치가 살판 치는 세계 최악의 인권불모지, 파쇼암흑사회'라고 비난(5.24, 중앙통신·노동신문)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케리 美 국무장관 회담(5.18, 서울)에 대해 "우리(北)와 엿서보려는 것은 맨발로 바위 차는 격의 부질없는 망동"으로 "적들이 그 어디에 있건 마음먹은 대로 일격에 타격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SLBM 실험성공 강조' 위협(5.25, 중앙통신·노동신문)
- 남한 당국의 5·24 조치는 '反北·반민족·반통일적 대결조치'라고 비난 및 "5·24조치를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 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고 철회 촉구(5.25, 중앙방송)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케리 국무장관 비난...“더 아프게 자극하겠다”(5/20,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20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의 현 행정부가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우리를 더 압박할 생각이라면 우리도 미 행정부를 압박할 능력과 수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우리를 자극할수록 우리도 미국을 더 아프게 자극할 수 있다”면서 “원수가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 대면 대포로

- 풍비박산 내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질”이라고 위협했다고 뉴스는 전함.
- 또한 대변인은 케리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핵 및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압박을 높이자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을 비난하면서 미국이 “남을 물어뜯는데 광분하고 있다”고 혈뜬음.
  - 북한은 지난 1월의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핵실험 임시 중단 교환 제안을 언급하며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를 여러 차례 마련해 주었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그 모든 기회를 다 날려 보내고 말았다”고 비난함.
  -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미국이 핵 문제의 실제적 해결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할 의지도 없으며 오직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끊임없이 격화”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 북한 “핵타격 수단 소형화 단계…도전하지 말라”(5/20, 연합뉴스)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2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의 핵 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중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며 중단거리 로켓은 물론 장거리 로켓의 정밀화, 지능화도 최상의 명중 확률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지난 5월8일 성과적으로 진행된 우리 전략잠수함의 탄도탄 수중시험발사는 조선의 군력 강화에서 최절정을 이룬 일대 장거”라며 “세계가 놀라움과 부러움 속에 환호하고 격찬하고 있다”고 선전함.
-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과 일본, 남한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저들에 대한 가장 엄중한 도발이며 따라서 처절함을 감수하게 대응하고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를 돋구어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높이려 한다”고 비난함.
- 이어 대변인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해 “그 누가 ‘도발’이라고 걸고 들고 ‘중지’하라고 고아댄다고(떠든다고) 하여 포기할 일이 아닌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력 강화 조치이며 합법적인 주권행사”라고 강조함.
- 그는 이어 “미국과 온갖 불순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공갈이 계속되고 침략과 제도전복의 날강도적인 책동이 로골화되는 오늘의 세계에서 나라의 국방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 계획을 더욱 힘차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임.

■ 북한 “우리의 핵무장 정의로운 것…남한은 시비 말라”(5/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의 자위적

- 핵무장력이야말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수단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 대변인은 “남조선 괴뢰패당은 매일 같이 ‘심각한 위협’이니, ‘도발행위중단’이니 뭐니 하고 고아대고 있는가 하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 그 무슨 ‘서한’을 보내는 추태까지 부리고 있다”고 비난함.
  - 대변인은 또 “박근혜까지 나서 ‘예측불가능성 대비’니, ‘유엔 결의 위반’이니 하면서 반공화국 대결 소동을 앞장에서 충동질하고 있으며 괴뢰군부 깡패들은 ‘초도화’니, ‘제압’이니 하는 악담질로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 조평통 대변인은 “우리의 핵 억제력이 없었더라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전 조선반도를 병탄하기 위해 끊임없는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는 미국에 의해 우리 민족은 돌이킬 수 없는 참화를 입었을 것”이라고 강조함.
  - 대변인은 이어 “괴뢰패당이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들수록 추악한 매국배족적 정체를 만천하에 더욱 드러내게 될 것이며 불구대천의 원수인 미제 침략자들과 함께 가장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함.

##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SLBM 발사 성공…미국 뒷잔등 시한탄 될 것”(5/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시간은 무엇을 증명해주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계열생산에 들어가고 가까운 시일 안에 실전 배비되면 적대 세력이 뒷잔등에 시한탄을 매달아 놓는 것이 된다”고 주장함.
  - 이어 “기술 완성으로 우리 혁명 무력은 마음먹은 대로 수중작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미국 정수리에 언제 어느 수역에서 탄도탄이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더 이상 우리를 겨냥한 선불질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발사 성공을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이 ‘재앙’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핵선제공격에서 살아남아 (북한의) 제2공격의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고, 그들의 미사일방위체계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아울러 발사 성공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다시 똑똑히 실증한다”며 “그의 집권 기간 우리는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핵시험을 각각 두 차례 성공시켰다”고 자랑함.

- 북한 “미국이 한반도 핵전쟁 기도…핵억제력 강화할 것”(5/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핵전과, 핵군비경쟁의 장본인은 미국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노골화하는 미국의 핵전쟁 책동에 대처해 우리 공화국이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이 아시아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야망에 남한을 1천여개 핵무기가 들어선 극동 최대 핵전초기지로 만들었다며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미국의 침략적 기도”라고 설명함.
  - 이어 미국의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은 지구를 핵위기에 몰아넣는 자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며,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또한 미국 등의 핵독점을 고수하고 그 특권체제를 법제화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규정함.
  - 신문은 “미국이야말로 지구상에 핵재난을 몰아오는 화근”이라며 “미국이 기만적인 ‘핵무기 없는 세계’를 제창하든 말든 그에 구애됨이 없이 전쟁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역설함.
  
- ‘착잡한’ 북한 “우리 앞길에 엄중한 난관 조성됐다”(5/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그 어떤 훼방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국이 추종세력들과 함께 정치군사적인 위협공갈과 압박, 경제제재에 미쳐날뛰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어 “최근년간 우리 당은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면서 “그러나 경제건설에 주력하던 우리 앞길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다”고 설명함.
  - 신문은 자신들의 위성발사와 핵실험을 거론하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제재결의’를 조작하여 우리의 합법적인 권리까지 빼앗으려는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를 감행했다”고 비난함.
  - 신문은 “미국이 우리에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위협 공갈하면서 다른 길을 선택하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대해 우리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함.

####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 바. 대일본

- 북한, 일본 강제징용 세계유산 추진 비난…“피렴치하다”(5/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논평을 통해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에 대해 “일제의 조선에 대한 40여년간의 군사적 강점을 합리화하려는 극히 비열한 행위이며 우리 인민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 할 특대형 반인륜 범죄”라고 평가함.

####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 자. 기타 국가

### ■ 특이사항 없음

- 미국 사회의 인권유린·인종차별행위 및 '반테러전'을 거론하며 "미국의 인권유린행위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비난(5.19,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러친선 학술토론회, 5월 19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 및 김일성종합대학 일꾼 및 러시아의 여러 대학(로모노소프명칭 모스크바국립종합대학 등) 대표 등 참가(5.19, 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 에너지 및 안전센터 대표단(단장 : 안톤 흐로프코프 소장), 5월 19일 평양 도착(5.19,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일방위협력지침 재개정에서 미국이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지지한 것 관련 '미국상전만 쳐다보면 괴뢰들은 외교적 고립에 빠져 어쩔 바를 몰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외적으로 망신만 당하고 외톨이신세로 굴러 떨어졌다'고 비난(5.20, 중앙통신·노동신문)
- 駐韓 美대사와 미국무성 6자회담 특사의 '北 비핵화' 발언 관련 '양보와 타협을 끌어내려는 술책'이라며 '핵무력은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민족의 국보'라고 주장(5.20,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일본 '우에무라 다카시(前 아사히신문 기자)' 강연은 "양심과 진실의 목소리"라며 일본 총리(일본군 성노예피해자들은 '인신매매피해자') 등 집권층의 '과거사 왜곡·미화분식' 경중(5.22, 중앙통신·노동신문)
- 전 美중앙정보국 부장관의 발언(이라크의 대량살육 무기 개발정보는 無근거)을 거론하며 '국제사회가 미국의 악랄하고 교활한 모략책동의 해독성과 위험성을 똑바로 간파하고 반대·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동(5.23,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베이징에서의 미국무장관 기자회견 발언(북핵 및 미사일) 관련 '동서남북을 싸다니며 온갖 감언이설을 다한다 해도 우리의 자주권 침해와 체제붕괴 시도는 절대 실현될 수 없다'며 '상대를 오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5.23, 중앙통신)
- 北, '미국은 이미 성능이 향상되고 기술적으로 보다 정교화된 각종 핵무기들의 탄두 생산계획을 완성하거나 생산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며 '미국이야말로 세계적인 핵전파와 군비경쟁을 산생시키는 주범'이라고 비난(5.24, 중앙통신·민주조선)
- 김정은 黨 제1비서, 5월 25일 「총련」 결성('55.5.25) 60주년 즈음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서한」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전달(5.26, 중앙방송·중앙통신)
- 日 내각의 '안정보장관련법' 개정안 승인은 "군국주의 재침야망에 환장이 된 자들의 망동"이라며 "만일 일본이 이대로 계속 나가면 나라는 파멸될 것"이라고 경고(5.25, 중앙통신·노동신문)
- 러시아 자유민주당 대표단(단장 : '이완 아브라모프' 국회의의 지역정책·북방 및 원동문제특위 위원), 5월 25일 평양 도착(5.25, 중앙통신·평양방송)
- 오만 외무성 대표단(단장: '아흐마드 빈 유시프 오바이드 알 하르시' 외교차관)·베트남 사회과학원 대표단(단장: '보 카잉 빙' 부원장), 5월 25일 각각 평양 도착(5.25, 중앙통신·중앙방송)

- 2015년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설명회에 참가할 세계해외조선인무역협회 대련(중국 다롄)지회 대표단 등(중국 료녕복사달집단유한공사 대표단·중국 료녕성호북상회 대표단·료녕동북아경제문화 촉진회 대표단·중국 홍콩글로벌실업투자집단유한공사 대표단), 5월 25일 평양 도착(5.25, 중앙통신·중앙방송)

### 3. 대내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이상해진’ 김정은, 자라 양식공장 현지시찰서 ‘격노’(5/19, 조선중앙통신)
  - 19일 조선중앙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동강 자라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 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실태를 요해하기(파악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었다”고 전함.
  - 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공장 여러 곳을 둘러보며 생산과 관리 실태를 살핀 뒤 ‘엄하게 지적’했다고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약재로만 쓰이던 자라를 먹일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시던 장군님(김정일)의 눈물겨운 사연이 깃들어 있는 공장이 어떻게 이런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억이 막혀(기가 막혀) 말이 나가지 않는다”고 질책함.
  - 또 그는 당에서 민물왕새우를 기르라고 종자를 보냈으나 공장에서는 2년이 지나도록 양식장을 완공하지 못했다며 “공장 일꾼들의 무능과 굳어진 사고방식, 무책임한 일본새(일하는 태도)의 발로”라고 지적함.
  - 그는 ‘현대화’, ‘기술화’ 측면에서도 공장이 뒤쳐지고 있다며 “수질 측정 및 자동 조종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이 공장에서처럼 양식장 내부를 감시나 하는 카메라를 설치해놓은 것이 무슨 종합조종실이고 현대화인가”라고 질책함.
- 김정은, 군부대 산하 양어장 시찰...이번엔 “대만족”(5/2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석막대서양

연어종어장과 낙산바다연어양어사업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그는 최근 자라 양식공장을 찾아 경영실태와 성과 등에 대해 맹렬한 질타를 늘어놓으며 크게 화를 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시찰 내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고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부화실, 치어 사육실, 물 여과장, 실내의 연못 등을 둘러보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놓은 것이 알리오, 잡도리가 다르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소”라며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덧붙임.
- 그는 이어 연어알 부화와 치어 사육에 사용한 물을 재활용해 칠색송어 등의 다른 물고기 양식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물 절약형 양어를 하는 데서 전국의 모범”이라고 치하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김정은, 함경도 군부대 시찰…현영철 모습 안보여(5/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64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었다”고 보도함.
-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장창화 군 소장이 수행했으며, 육군 중장인 김성일 대연합부대장, 육군 소장인 한표섭 부대 정치위원 등 부대 지휘관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 일행을 맞이했다고 통신은 전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김정은 친형 김정철 런던 체류…4년만에 모습 드러내(5/22, 연합뉴스)

- 김정철은 20일 오후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열린 에릭 클랩튼의 공연을 관람하고 런던 시내 첼시 지역의 호텔에 체류하고 있으며, 22일 모스크바로 떠날 것으로 연합뉴스는 전함.

##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문학예술계 질타…“모란봉악단처럼 분발하라”(5/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백두의 칼바람으로 침체를 불사르고 문학예술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예술단체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창작경쟁, 실력경쟁, 집단적 혁신의 역풍을 일으켜야 한다”고 역설함.
  - 신문은 “문학예술부문이 아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시대와 인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명작이 ‘팡팡’ 쏟아져나오지 않는다”며 이는 “사상적 침체이자 사상적 안일성의 표현”이라고 공격함.
  - 이어 “패배주의적 사상관점을 털어버리지 않으면 명작을 내놓을 수 없다”며 “일꾼들은 주저앉아 우는소리, 조건타발만 하는 사람은 우리 대오에 설자리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각성, 분발해야 한다”고 경고함.
  - 신문은 “모란봉악단처럼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결사관철하자, 이런 각오를 지니고 문학예술 부문의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며 모란봉악단을 치켜세움.
- 북한, 반당종파분자 숙청 서사시 띄우기…“뚝뚝히 보라”(5/23,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3일 북한 최고의 서사시인으로 불리는 신병강 인민무력부 조선인민군창작사가 쓴 ‘백두산의 칼바람-2’라는 제목의 서사시를 방영하며 반당 종파분자에 대한 숙청 의지와 함께 유일영도체제 사수를 다짐함.
  - 이 시는 종파분자들을 일일이 언급한 뒤 ‘현대판 종파’인 장성택까지 언급하며 이들이 “앞에선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에 가선 수령의 권위를 헐뜯고 수령의 명령에 불복하고 극도의 개인 향락에 젖어 제 주머니를 채우던 자들”이라고 비난함.
  - 그러면서 이들이 “단 한치의 자비와 양보를 모르는 백두의 서리찬 칼바람에 맞아 어떻게 썩은 진대나무처럼 나자빠졌는가”를 “뚝뚝히 보라”고 경고하며 종파와 반역에 대한 숙청의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라고 당부함.

- 박봉주(내각총리), 황해남도 재령·안악·은천·은률군의 모내기 정형 현지요해(5.18, 중앙통신)
- ‘전승의 7·27을 안아온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은 금은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사상정신적 유산’이라며 ‘모든 일꾼들은 1950년대에 발휘된 조국수호정신으로 무장하고 그 정신으로 강성국가 건설과 반미대결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자’고 강조(5.18, 중앙통신·노동신문)
- 평안북도·황해북도, 道 육아원·애육원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고 선전(5.20, 중앙방송)
- ‘온 나라에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조국해방 70돌과 당창건 70돌을 성대히 맞이해야 한다’며 ‘농산·축산·수산과 건설부문에서는 증산하고 또 증산해야 한다’고 강조(5.21,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기술자·노동자·일꾼들과 함께 기념촬영(5.26, 중앙통신·중앙방송)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조치

- 북한, 관광도시 원산 착공식 거행...금강산 개발 박차(5/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강원도 원산 갈마거리에서 김용진 내각부총리와 원산시 관계자들, 건설자들, 근로자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구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원산지구를 세계적인 관광도시, 도시형성의 본보기로 꾸릴 데 대한 통이 큰 작전을 펼쳐주시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전당, 전국을 힘있게 불러 일으키신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밝힘.
  - 이어 참가자들이 “수령님들의 유훈 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의 불 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건설투쟁에서 선군조선의 위력을 다시 한 번 힘있게 떨쳐나갈 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전함.

##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외 경제 관계

- 카타르 건설사가 해고한 북한 노동자 90명 추방돼(5/22,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2일 카타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해고된 북한 노동자 90명이 지난 14일 30명, 15일 60명 등 두 차례로 나뉘어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전함.
  - CDC는 노동자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북한 감독관들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에서 보건·안전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카타르 당국자들과 마찰을 빚게 돼 불만을 느낀 것으로 알려짐.
  - CDC는 북한 대사관 측의 요청 등을 고려해 192명 전원을 해고하려다 90명만 해고했으나, 나머지 노동자들도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회사의 보건·안전 규정을 어기면 즉각 해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 각지 협동농장들, 전체 논 면적의 90%에 물절약형 농법을 도입하여 전국적인 벼모판 면적이 8,500여 정보 줄어들고 많은 벼 종자들이 절약되었다고 선전(5.20, 중앙통신)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마. 사회 동향

- 북한, 개성 만월대서 궁전유적 3개 추가 발굴(5/18,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개성에 있는 고려시대(918-1392년) 왕궁터 만월대에서 궁전유적 3개를 새로 발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전함.
  - 만월대는 북한이 2007년부터 남북 공동발굴작업을 진행해 온 곳으로, 김정일 사망 직후 공동 작업을 중단했다 지난해 7월 공동 발굴조사 사업이 재개됐다고 연합뉴스는 설명함.
  - 개성 만월대 터는 총 25만㎡ 규모로, 서부건축군 3만3천㎡에 대해 발굴터를 원상회복하는 작업이 남북공동 작업의 일부로 추진 중이라고 뉴스는 덧붙임.

- 위민크로스DMZ 여성운동가들 평양 도착…환영연회 참석(5/19, 조선중앙통신)
  - 24일 비무장지대(DMZ)를 걸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위민크로스 DMZ’(WCD) 행사에 참가할 국제여성평화 운동가들이 19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이 행사의 북측 담당 기관인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조선위원회’가 19일 평양 양각도국제호텔에서 환영 연회를 마련했다고 전함.
  
- 유엔 “북한서 결핵으로 매년 2천500여명 사망”(5/20, 미국의소리)
  - 유엔은 최근 발표한 ‘2015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전함.
  - 보고서는 북한에서 매년 3천900여명의 다제내성 결핵(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만성 결핵)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결핵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함.
  - 유엔은 특히 환자를 돌보는 여성과 아이들이 결핵에 감염된 환자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높으면서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북한 전체 결핵 환자 중 1.9%가 어린이였다고 강조함.
  
- 유진벨재단 “북한에 결핵병동 3채 지어”(5/21, 연합뉴스)
  - 유진벨재단 방북대표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평양 부근 요양소에 조립식 병동 3채를 조립했다고 21일 연합뉴스는 밝힘.
  - 인세반 유진벨재단 회장 등 16명으로 구성된 방북대표단은 치료팀과 건축팀으로 나뉘 북한에서 결핵 치료 활동을 벌였다고 전함.
  - 재단은 오는 가을 다시 북한을 방문해 조립식 병동 4채를 더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뉴스는 덧붙임.
  
- 미국 구호단체, 북한 보건 관계자에 B형간염 예방접종(5/22, 미국의소리)
  - 미국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북한의 보건 관계자들에게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함.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테리 스미스 국장은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결핵실험실 전문가 1명 등 5명이 북한의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관계자들에게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 오는 26일에는 이 단체의 후원자 8명이 추가로 북한을 방문해 식량과 의약품, 수도설비 등 지원품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매체는 전함.
- 위민크로스DMZ, 군사분계선 넘어 남으로...“평화위한 전진”(5/24, 연합뉴스)
  -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를 걸어서 넘는 행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위민크로스DMZ(WCD) 대표단 30여명이 24일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으로 넘어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당초 이들은 판문점을 통해 남측으로 넘어올 계획이었으나, 남한 당국과 유엔사령부의 권고에 따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DMZ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옴.

- 곽철 선수, ‘콘스탄틴 꼬로뜨꼬브명칭 국제권투경기대회(러시아 하바롭스크, 16개국·지역 남자선수 120여명 참가)’ 48kg급 금메달 획득(5.19,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 박영기 ‘총련’ 부국장), 5월 19일 평양 출발(5.19,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연구실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미 합참차장 北 SLBM 조작 가능성 시사…“기술능력 아직 멀었다”(5/20, 연합뉴스)
  -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19일(현지시간)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미사일방어와 미국 국가안보’ 주제의 세미나에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해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함.
  - 그는 북한의 SLBM 사출시험과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는) 운 좋게도 북한은 자신들의 ‘영리한 비디오 편집자’와 ‘스핀 마이스터(부정적인 의미의 선전 전문가)’가 우리를 믿게 하려는 것만큼 기술 수준이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그런 SLBM 기술능력을 개발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덧붙임.
  - 윈펠드 차장은 그러나 “북한이 만약 결국에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이는 곧 한국과 일본은 물론 현지 주둔 미군들이 북한의 SLBM을 사전에 탐지하기 어려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역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함.
- 국방부, “北 SLBM 조작 아니다…사출시험 성공은 사실”(5/20, 연합뉴스)
  - 국방부는 미군 당국자의 발언으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의 ‘조작’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SLBM 사출시험 자체에 성공했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히고, “SLBM이 잠수함에서 발사돼 물 밖으로 솟아올라 약 150m 날아간 것은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함.
  -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제임스 윈펠드 미 합참 차장의 발언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윈펠드 차장의 말은 북한이 SLBM 발사시험에 완전히 성공한 듯이 선전하는 것만큼의 “SLBM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것으로, 아직 우려할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라며 “사출시험 자체가 조작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함.

- 백악관, “북한 핵탄두 소형화 능력 없어” 일축(5/20, 연합뉴스)
  - 패트릭 벤트렐 美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기준과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이 핵 타격 수단의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일축함.
  - 벤트렐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우리의 동맹은 물론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다수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함.
  - 벤트렐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 행정부가 현재 (아·태지역) 역내 및 본토에 대한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6자회담 당사국들과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라고 덧붙임.
  
-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北SLBM 대응논의(5/21, 연합뉴스)
  -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SLBM 시험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과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1718위원회)가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최근 대북제재위에 보냈다고 밝혔고, 미국과 일본 정부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대북제재위에 보낸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대북제재위는 패널을 구성해 관련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대북 결의 제1718호에 따라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결의 위반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며, 또 90일마다 권고 등 위원회 작업에 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함.
  - 북한의 SLBM 시험발사와 상관없이 당초부터 예정된 오는 28일 대북제재위의 안보리 보고 과정에서 북의 SLBM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는데, 북한의 SLBM 시험발사에 대해 대북제재위 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안보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음.
  
- 중국, 북한 핵탄두 소형화 주장에 “자극 말라”(5/21,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북한이 핵 타격 수단의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 것을 촉구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 및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복잡하고 민감하다”면서 “우리는 관련 당사국이 절제를 유지함으로써 사태를 완화하고 서로 자극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실제 행동으로 상호간 소통을 증진하고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는 노력에 나섬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안정이란 큰 틀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자신들의 핵 능력을 거론하며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을 위협하고 나선 데 대해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됨.

■ **日 정부, “북한 핵·미사일은 중대한 안보 위협”(5/21, 연합뉴스)**

- 북한이 핵 타격 수단의 ‘소형화’, ‘다중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이 자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사일 공격 위협 등 도발적 언동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안전에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밝히고, 이어 “정부는 중대한 관심을 갖고 각종 정보 수집과 함께 만전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임.
-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주장 등이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법제화(안보법제 정비)에 순풍이 될 것으로 점침.

■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회동…대북압박에 무게 실릴 듯(5/22, 연합뉴스)**

- 지난 1월28일 일본 도쿄에서 3자 회동을 가진 이후 약 4개월 만에 5.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은 북핵을 축으로 하는 한반도 정세의 엄중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외교부는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대해 “억지·압박·대화의 측면에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각적 방안들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회동에서 한미일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으면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최대한 억지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임.

-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은 유지하지만 압박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은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에 “압력을 더 가중시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우리 정부도 최근 북한 SLBM 시험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조사 착수를 요청했으며, 미일도 각각 서한 발송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짐.
  - 한미일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유인책을 고안해 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데,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은 본격적인 6자회담 재개에 앞서 그동안 탐색적 대화를 추진해왔지만 북측은 이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5자가 모여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오히려 북측의 반발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져서 중력을 포함한 5자회담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한미일 3자회담 결과를 토대로 한중이나 미중 등 5개국 사이에서의 양자회담이 이어질 수도 있음.
- 미국, ‘北ICBM’ 식별 레이더 2020년까지 알래스카 배치(5/24, 연합뉴스)
    - 미국방부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신형 장거리 식별레이더(LRDR)를 알래스카주 내륙 중앙의 클리어 공군기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국 본토방어의 핵심인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GMD)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함.
    - 이 레이더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비행 중간단계에서 식별·추적하는 장비로, 미국 서해안에 배치되는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 GBI 30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0억 달러를 들여 14기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인 한편, 미사일 방어청은 신형 레이더의 설계와 개발작업을 진행 중이며 기술적 요구조건을 평가하고 있음.
  - 日서 28일 ‘6자회담국 1.5대화’ NEACD…北 불참할듯(5/25,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반관반민(트랙 1.5) 성격의 대화체인 동북

아시아 협력대화(NEACD)가 오는 28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은 지난해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밝힘.

- NEACD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산하 국제 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가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의 외교·국방 관료와 학자들을 초청해 매년 진행하는 다자간 안보 대화체제이며, 기본적으로 동북아 지역 안보 사안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학술적 성격의 비공식적 포럼임.
- 그러나 각국에서 주로 6자회담 차석대표(국장급)가 참여하기 때문에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자리가 되기도 해 주목을 받아 왔으며,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에서 보이듯 최근 더욱 엄중한 국면으로 가는 북핵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임.
- 우리 정부에서는 통상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국장급 당국자가 초청받아 참여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김건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고, 회의에는 미국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짐.

## 나. 미·북 관계

- 美 뉴욕타임스(NYT), “북 정권, 당장은 아니지만 갑자기 무너질 것”(5/19, 연합뉴스)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공포’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가 당장은 버티겠지만 어느 시점에 갑자기 무너질 것으로 전망하며 주변국들에 대비를 촉구함.
  - 이 신문은 과거 북한의 모델이었던 소련 공산주의 체제가 불과 40년 만에 무너지는 등 현대사에서 독재정권이 오래 지속한 전례가 없다면서도 북한 정권의 붕괴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한 한편, “김정은 체제는 반드시 어느 시점에 급작스럽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무너질 것”이라며 “그때 한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을 구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또 “미국과 우방들은 김정은을 저지할 방법을 계속 찾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함.

- NYT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방한 기간에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김정은에게 압박을 가할 더 많은 방법을 찾는 일이 필수이며 중국도 여기에 동참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함.
- 미국무부 5·18 비밀문건 폭로 ‘주역’…“북한군 개입 내용 없어”(5/20, 연합뉴스)
  - 광주시민의 날을 맞아 광주를 찾은 미국 국무부의 5·18 관련 기밀문서 공개의 주역인 티모시 스콧 샤록(64·Timothy Scott Shorrock) 미국 연방공무원노동조합(AFGE) 정책 분석관은 5·18 기간 중 북한군 600여명이 광주에 잠입, 폭동을 조종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미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들이 보고받은 내용과 회의록이 담긴 체로키 문서에는 당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말함.
  - 그가 공개한 일명 ‘체로키(Cherokee) 문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후 당시 미국 카터 대통령이 한국 상황을 주시하고자 극소수 고위관리들로 구성된 체로키팀이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 등과 교신하며 회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문서에는 미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을 묵인, 방조한 것과 광주로의 군대 이동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나 있음.
  - 이에 따라 1989년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의 5·18광주 민주화운동 조사특별 위원회에 보낸 공식 답변에서 공수특전단의 광주 동원을 사전에 몰랐고 20사단의 이동을 승인한 적도 없다고 한 말이 거짓임이 밝혀짐.
- 북한, 케리 국무장관 비난…“더 아프게 자극하겠다”(5/20, 연합뉴스)
  - 북한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방한 중 북핵 위협 발언을 ‘망발’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에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
  -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의 현 행정부가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우리를 더 압박할 생각이라면 우리도 미 행정부를 압박할 능력과 수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이어 “미국이 우리를 자극할수록 우리도 미국을 더 아프게 자극할 수 있다”면서 “원수가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 대면 대포로 풍비박산 내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질”이라고 위협함.

- 미 상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추가제재 결의안 발의(5/21, 연합뉴스)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이 19일(현지시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 재지정 등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함.
  -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잇따른 군사 위협과 인권탄압, 국제 법규 및 협약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북한에 대한 맞춤형 추가 제재와 함께 핵개발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핵확산 활동 중단, 군사도발 행위 중단, 인권개선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어떤 형태의 대북대화도 하지 말 것을 미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가드너 의원은 결의안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소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은 실패한 것이 자명하며, 따라서 지금의 대북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어 “이 결의안은 ‘우리가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행정부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함.
  
- 北 커지는 핵·미사일 능력에 美의회 추가제재 ‘고삐’(5/21, 연합뉴스)
  - 북한을 향한 미국 의회의 기류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는데,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뚜렷이 증강되는 신호가 감지되면서 상·하원 곳곳에서 대북 제재론이 고개를 내밀고 있음.
  -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연방 상원의원이 19일(현지시간)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인데, 특히 이번 결의안은 (1) 1987년 대한항공 858기 격추사건 (2)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3) 3차에 걸친 핵실험 (4) 시리아·리비아에 대한 핵기술 이전 (5)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북한인권 실태 등 대북 제재 강화의 논거가 될 수 있는 ‘트랙 레코드’를 상황하게 열거하고 있음.
  - 한편, 하원 외교위는 새로운 114대 회기의 우선 입법과제로 대북 제재 강화 입법을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은 곧바로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법안(H.R. 757)을 발의했고 2월 말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킴.
  - 한 외교소식통은 “대북 제재 강화는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새로운 114대

회기(2015~2016)에 추진할 정책 안건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함.

- 신임 미 태평양사령관, “북한이 최대 위협”(5/25, 연합뉴스)
  - 미국의 새 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59) 해군 제독이 작전 구역의 가장 큰 위협으로 북한을 꼽았는데, 그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김정은)는 핵무기와 함께 대륙 너머로 핵무기를 날려 보낼 수단을 가지려 하고 있다”고 우려함.
  - 오는 27일 태평양사령관으로 취임하는 해리스 사령관은 이어 “그(김정은)가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뒀야 한다”고도 말하고,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 같은 활동을 하는 데 대해 “국제법과 규정에 맞지 않고 주변국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비판함.
  - 미군의 태평양사령부는 한국을 포함해 인도양부터 미국의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지역을 작전 구역으로 삼고 있으며, 소속 인력은 군인과 군무원을 모두 합하면 36만 명에 이룸.

#### 다. 중·북 관계

- <5·24조치 5년> 북한의 대중의존도 급격히 커져(5/20, 연합뉴스)
  - 천안함 사건이 터진 해인 2010년 이후, 지난 5년간 북중 교역액은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였고,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11년 이미 80%를 돌파함. 이는 한국정부가 5·24 조치로 대북 투자를 급격히 줄이자 북한은 중국을 유일한 생존의 돌파구로 인식한 셈임.
  - 5·24 조치가 내려진 2010년 이후 북중 경협이 황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1999년 3억 7천만 달러에 불과하고 2007년까지도 10억 달러 대에 머물렀던 중국의 대북교역은 2010년에 30억 달러 대를 기록하고 이듬해에는 63억 2천만 달러로 대폭 증가함.
  - 5·24 조치로 외자 확보에 비상이 걸린 북한은 1991년 경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진척이 더뎠던 나선경제특구개발에 중국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나섰고, 2012년 여름 북중 양국이 30억 달러 규모의 나선경제특구 개발 계획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돌았는데, 이 계획에는 항만, 비행장, 철도건설, 화력발전소 건설 등이

- 포함됨.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런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나진항 초장기 사용계약’ 등은 사실로 드러남.
-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와 접경한 북한 소유의 압록강 섬인 황금평을 양국이 경제특구로 공동개발한다는 이른바 ‘황금평 프로젝트’ 역시 한국의 5·24 조치 이후 본격 추진된 사업 중 하나인데, 중국 투먼(圖們)과 함경북도 칠보산을 잇는 관광열차가 2011년 10월 북중관광철도 노선으로는 처음 개통되는 등 중국에서 출발해 북한 곳곳의 명승지를 여행하는 도로, 철도, 항공, 선박 관광코스가 지난 5년 사이 유례없이 증가함.
  - 전문가들은 양국의 경제협력이 2010년 들어 ‘북한정권에 대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일방적 흐름에서 ‘원원구조’로 변화했다고 보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정상적인 교역이 불가능한 북한으로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신압록대교가 개통되면 대중 의존도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함. 중국 부담으로 건설된 신압록대교는 북한 측이 대교 연결 지점에 통관시설과 연결도로를 갖추지 못해 개통식이 연기된 상태임.
  - 그러나 북한의 지나친 대중 의존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종속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으며, 북중경협이 확대가 사실상 남북경협을 대체하는 결과로 이어져 온 만큼, 북한의 지나친 대중 의존은 장기적으로 남북통합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됨.
- **주북 중국대사 부임 3개월째 김정은 못만나 해석 ‘분분’(5/20, 연합뉴스)**
    - 지난 3월 평양에 부임한 리진권(李進軍) 신임 주북한 중국대사가 3개월 가까이 활발한 행보를 펼치고 있음에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음.
    -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리 대사는 부임 직후인 지난 3월 30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뒤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만났는데, 리 대사와의 접견 인사 가운데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름은 아직 찾아볼 수 없음.
    - 이를 두고 여전히 냉랭한 북중 관계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시사평론가 환츠산(阮次山)은 최근 홍콩 봉황(鳳凰) 위성 TV에 출연하여 “우리 대사를 당신이 접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모욕”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과거처럼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외교가에서는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만 북한이 아직은 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근거로 과연 김 제1위원장이 리 대사를 언제 접견할지가 앞으로 북중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한 관측통은 “김 제1위원장이 주북한 대사를 언제 접견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가 앞으로의 북중 관계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함.

■ 중국 군사전문가, “김정은 9월 방중 가능성 90%”(5/25,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9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제2차 대전) 승리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중국의 한 군사평론가가 전망함.
- 중국 인민해방군 소장 출신인 쉬광위(徐光裕)는 “이것(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의 정치적 의미는 매우 무겁다. 그 역시 이 부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또 “그가 만약 오지 않는다면 치러야 할 정치적 대가가 너무 크다”며 “러시아의 경우 S-300(러시아의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하지 않으면 그만이었지만, 중국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복잡하고 커질 것”이라고 덧붙임.
- 쉬광위는 이어 김 제1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 측 체면을 세워주고 이를 통해 6자회담이나 핵문제 등에서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 할 것이라고 “이런 몇 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방중 가능성은 90%”라고 거듭 강조함.

## 라. 일·북 관계

■日韩방장관, “자위대, 미사일 저지위한 적기지 공격도 가능”(5/25,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자위대가 타국 영역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로 타국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적기지 공격도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회견에서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유도탄 등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자위의 범위에 포함돼 가능하다”고 강조함.
- 그는 특히 현행헌법상 허용되는 개별 자위권 행사의 예로도 적기지 공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지만, 다만 “(자위대는) 적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한 장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임.

####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바. 기타

- 위민크로스DMZ “관문점으로 DMZ 통과” 거듭 요청(5/19, 연합뉴스)
  - 세계 여성평화운동단체 ‘위민크로스디엠지(WCD)’가 “관문점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이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전쟁의 가장 상징적인 잔재”라면서, 한국 정부와 유엔군 사령부의 난색 표명에도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문점을 통해 남북 비무장지대(DMZ)를 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이들은 “관문점을 걸어서 넘는 것은 15개국에서 온 여성들이 남북한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의미”라면서 “관문점에서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도보는 국제여성 평화걷기의 가장 큰 취지이자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민간 평화운동가들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절차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믿는다”고 덧붙임.
  - 이들이 관문점 통과를 고수하는데다 우리 정부도 이들이 관문점을 통해 내려오더라도 체포하지 않고 경의선 남북출입국사무소를 통한 정상적 입경 절차를 밟게 한다는 방침이어서 현재로서는 ‘관문점 통과 후 입경 절차 이행’ 가능성이 커 보임.
  - 이들은 19일 오후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 북측의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대행진 준비위원회’ 등과 공동행사를 하고서 24일 남측으로 내려와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WCD와 함께하는 평화 축제’ 등의 행사를 한 뒤 26일 출국할 예정임.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미 전문가들,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접고 위안부에 배상하라”(05/19,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이 바닥으로 떨어진 외교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서로 큰 틀의 양보와 타협을 하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제기됐는데, 특히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면 한국은 일본의 최종적 제안으로 수용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골자를 이루고 있어 주목됨.
  -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지일파 학자인 브래드 글로서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이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제안을 담은 ‘한·일 정체성 충돌’이라는 공동저서를 소개함.
  - 두 연구원은 “한국은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이자 ‘한류’의 고향으로서 자신감이 넘치는, 성장 가도에 있는 국가”라며 “그러나 한국인들 사이에는 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다시 말해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와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있으며, 이 때문에 국가적 지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특히 “20세기 초 일제 강점기에 따라 일본에 대한 우려가 한국인들의 민족정신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고 지적함.
  - 두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정치적·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는 했으나,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 의해 아시아의 지도적 위치를 잠식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풀이하고, 또 “과거사 문제를 놓고는 일본인들이 과거 제국주의의 희생양이라고 느끼거나 일부 극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2차대전 승전국들에 의해 희생을 당했다고 여긴다”고 설명함.
  - 두 연구원은 “양국이 정체성 갈등을 겪고 있다는 관점에서 과거사 문제와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그랜드 바젠’ 또는 ‘그랜드 리셋(reset·재설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특히 일본에 대해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의 정부와 군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와 부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일본 정부는 일제 당시 성 노예로서의 고통을 겪은 희생자 개인들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일본 총리들은 내각과 당 고위층 인사들에게 역사수정주의와 관련해 ‘무관용(zero-tolerance)’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미국 무역전문가들, “한미FTA, 미국 무역외교의 동력”(05/19, 연합뉴스)
  - 정책연구기관 한미경제연구소(KEI)가 ‘동아시아 자유무역의 미래’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미국의 무역 전문가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 무역외교의 동력”이자 “한미 경제관계의 기반”이라고 호평함.
  - 미래야 솔리스 브루킹스연구소 일본석좌는 “한미FTA는 미국 무역외교가 동력을 얻게 만든 두 개의 중요한 체제 중 하나”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의 동력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라고 소개한 솔리스 브루킹스연구소 일본석좌는 “미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무역협상을 추진하고 결국 TPP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미FTA는 중요한 모범사례였다”고 평가함.
  - 제임스 파더리 한미재계회의 부회장도 한미FTA를 “최선의 FTA”라며 “미국과 한국이 더 크고 고차원적인 경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는 의견을 내고, 미국 일각에서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확대를 이유로 한미FTA가 미국에 불리한 무역협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파더리 부회장은 “무역수지라는 한 가지 지표만 보는 일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반박함.
- 日 언론, “방한 케리, 한일 모두에 화해 촉구”(05/19, 연합뉴스)
  - 일본 주요 언론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전날 방한과 관련, 케리 장관이 한일 양측에 화해 노력을 촉구한 점을 부각했는데, 북한과 중국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각 공조의 복원을 위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보다는 양국 모두에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케리의 방한 메시지를 해석한 것임.
  - 일부 보수 언론은 미국이 한국 정부의 대일 강경자세 완화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는데, 아사히 신문은 작년 3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린 뒤 1년여 지나도록 한일 정상간의 대화 기운이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케리가

역사문제를 둘러싼 화해 촉구에 이전보다 한 걸음 더 내디뎠다고 풀이하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은 역사 문제로 갈등이 장기화하는 일한 양국 정부의 관계 복구를 요구했다”며 “북한과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 재건이 필수적이라는 위기감이 투영됐다”고 적음.

- 반면,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이 한국에 이례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케리 장관이 일한관계 개선을 원하는 미국 입장을 강조하고, 역사문제를 둘러싼 박근혜 정권의 경직된 자세에 변화를 요구했다”고 적고,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이례적으로 압력 외교에 나선 모양새”라고 덧붙임.

■ 미국 사드 한반도 배치 불 지피기…‘영구주둔’ 언급까지(05/20, 연합뉴스)

-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나섰는데, 특히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처음으로 ‘한반도 영구 주둔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19일 미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한미연구소(ICAS) 주최 토론회에서 “사드가 한국에서 가동된다면 전적으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처할 방어용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록 우리가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함. 미 정부 핵심 관계자가 사드 포대의 한반도 ‘영구 주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미사일방어와 미국 국가안보’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와 이 문제에 관해 아직 공식으로 어떤 종류의 대화도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여건이 성숙되면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미 정부 관리들의 사드 공개 언급은 최근 극도로 신중을 기해온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인데, 이 같은 흐름을 놓고 일각에선 미 정부가 본격적으로 한국 정부를 우회 압박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음.

- 中 언론, “미, 한국에 사드압박 강화”...케리 미 국무장관 발언 촉각(05/20,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화됐다고 분석함.
  - 신화통신은 케리 장관은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해 미군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위협을 거론하고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talking about) 이유”라고 밝히면서 한국에 대한 MD(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 압력을 ‘우회적으로’ 강화했고, 그의 이런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불쾌하게 반응했다고 보도함.
  - 신화통신은 “비록 우회적인 방법이지만 2013년 2월 취임한 케리 장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부연했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이러한 사드 배치 압박은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이후에 강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기도 함.
  - 또 사드 배치 여부는 미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은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해석함.
  
- 미 하원 외교위원장, “독도는 한국땅” 발언에 한인들 기립박수(05/20, 연합뉴스)
  - 미국 의회의 대표적 친한파 의원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19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제1회 재미한인지도자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 독도는 한국 땅(Dokdo island is part of Korea)”이라고 밝힘으로써 또 다시 독도문제에 확실한 쐐기를 박고 나섰으며, 로이스 위원장은 이어 “독도문제는 역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독도가 지금까지 한국 땅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함.
  - 이 같은 발언은 한국 국회 대표로 대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지난주 한국 국회대표단과의 면담 때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밝혔는데,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주문한데 대한 답변으로 나옴.
  - 앞서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14일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 의원이 이끄는 국회

한미외교협의회 협의회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는 지난 200년간 인류역사상 가장 불안정한 시기였으며, 이 시기에 한국의 영토였던 독도가 일본으로 귀속됐다”면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볼 때 독도는 분명한 한국의 영토”라고 밝힌 바 있음.

- 미 국무부, “케리의 사드 발언은 우리 내부논의 언급한 것”(05/21, 연합뉴스)
  -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케리 국무장관이 최근 방한 기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미 정부 내부에서 오가는 논의에 대해 편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면서 “사드는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주제도 아니었다”고 설명함.
  - 미 정부 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하거나 논의한 것은 없다는 게 하프 대변인 대행의 설명임.
  - 이처럼 케리 장관이 처음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공개로 언급하면서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 사드 배치 압박을 본격화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함.
  
- 국방부, “미국이 요청하면 사드 배치 협의할 것”(05/21, 연합뉴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청하면 정부도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아직 미국으로부터 협의 요청은 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임.
  - 한편 국방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2013년 사드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국내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드를 평가한 사실도 없으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것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힘.
  - 김 대변인은 2013년 4월 말~5월 초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사업과 관련해 미국 록히드마틴사를 방문했으며 사드에 관한 설명도 들었으나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정부가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사드와 관련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은 바도 없다”고 덧붙임.

- 러셀 미국무부 차관보, “한미정상회담서 사드 논의 기대 안해”(05/22, 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힘.
  - 그는 이어 “전통적으로 사드와 같은 종류의 특정 방어체계 문제는 정상급에서 협의 또는 결정하기 전에 실무적 계통을 통해 협의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우리는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 대 정부의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함.
  -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한국 내의 민감한 기류와 미국 행정부 내부의 실무검토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양국 간 협의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으로 풀이됨.
  - 러셀 차관보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방한 과정에서 사드를 내부적으로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마치 양자 간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잘못 해석되고, 또 잘못 보도됐다”고 말하고,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가 사드 포대의 한반도 영구 배치를 검토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는 “사드를 비롯해 어떤 시스템이 효과적인지 미국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해명함.

## 나. 한·중 관계

- 한국 ‘일대일로’ 중점도시 중허베이 공략 ‘고삐’(05/18, 연합뉴스)
  - 한국이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징진지(京津冀 :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프로젝트로 주목받는 허베이(河北)성 공략에 착수함.
  - 한국은 허베이성 량팡(廊坊)시에서 올해 31회째로 개막한 허베이성 최대의 국제무역투자전시회 ‘2015 량팡 국제경제무역상담’에 첫 주빈국으로 참가했는데, 한국은 김장수 주중 대사(단장)를 비롯해 김태운(북경현대 총경리) 중국 한국상회 회장, 장원기 중국삼성 사장 등 모두 120여 명을 파견함.

- 특히 한국투자환경과 문화·관광자원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 홍보관’,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업과 조달기업을 소개하는 ‘중소기업관’ 등으로 구성된 대형 주빈국관(735㎡)을 설치함.
  - 김 대사는 이날 오전 주빈국관 개관식에 참석한 장칭웨이(張慶偉) 허베이성 성장, 친보용(秦博勇) 부성장과 만나 “일대일로 등 한국-허베이성이 앞으로 협력해나갈 부분이 많다”고 말했고, 장 성장은 이에 대해 “김 대사가 중국에 있는 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해나가자”고 말함.
- 중국 조선족자치주, ‘일대일로’ 전략 요충지로 부상(05/21, 연합뉴스)
- 오는 24일부터 러시아·북한·동해와 인접한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있는 훈춘(琿春)과 러시아 자르비노, 한국 부산을 잇는 육해 연결수송로가 정기적으로 열린다고 현지 매체인 연변인터넷방송이 전하면서, 중국동포 최대 밀집지역인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전략 요충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 방송은 정기항로 개통으로 지린성이 국가 일대일로 전략을 주도적으로 감당하면서 중국의 북쪽 개방창구로 기능할 것으로 내다봄.
  - 이와 관련해 연변조선족 전국정치협상회의 취안진쯔(權貞子) 위원은 “일대일로 전략은 연변지역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며 “조선족자치주는 중국 내륙과 동해를 잇는 통로라는 이점을 살려 국가발전 전략의 요충지가 될 것”이라고 말함.

#### 다. 한·일 관계

- 일본 관방장관, “한일 정상회담 조건없이 이뤄져야”(05/19,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한 데 대해 두나라 정상회담은 전제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
  - 스가 장관은 정례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두고 있으며 대국적 관점에서 조건 없이 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북한 문제 대응 등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일본은 이러한 3국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日세계유산’ 우려 전달(05/19,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방한 중인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강제노동 사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산업혁명 시설로 미화하는 것은 또 하나의 역사왜곡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정부는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결정문에 관련 내용 적시 등을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 관련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임.
  - 보코바 사무총장이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실질적인 권한은 없지만 우리 정부 입장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날 면담이 의미가 있음.
  
- 세계 역사학계 집단성명 파동 ‘확산일로’…입지 좁아지는 아베(05/19, 연합뉴스)
  - 일본 아베 정권의 과거사 직시를 촉구하는 세계 역사학계의 ‘켈기’가 그야말로 요원의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데, 석학 187인이 서명한 집단성명이 나온 이후 세계 곳곳의 학자들이 앞다퉈 동참하겠다고 나서면서 18일(현지시간) 현재 전체 서명자 숫자가 불과 2주 만에 456명에 달하고 있음.
  - 특히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에 속한 학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 드라이브에 반기를 드는 전 세계 양심적 학자군(群)의 외연이 양과 질 모두에서 확산하고 있음.
  - 한 국가의 특정 정권을 겨냥해 학자들이 지역과 전공을 넘어 이토록 대규모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세계 지성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아베 정권의 ‘과거사 역주’를 이대로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국제사회 전반의 비판적 기류가 극명히 반영된 결과물로 풀이되고 있음.
  - 추가 서명에 동참한 학자들은 미국과 유럽, 일본, 호주, 남미 등 거의 모든 지역을 망라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6일 집단성명은 미국과 호주 학자들이 주도했지만, 이번에는 유럽과 일본 쪽 학자들이 주로 참여함.

- 한독의원친선협, 독일에 日 세계유산 등재 반대 서한 전달(05/20, 연합뉴스)
  - 한·독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독일을 방문중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등 협회 방문단은 19일(현지시간) 독·한의원친선협회 회장인 하르트무트 코쉬크 의원을 만나 일제 강제노역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한다는 한·독의원친선협회 명의의 서한을 전달하고 독일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함.
  - 홍 의원 등은 이날 만찬을 겸한 만남에서 일제 치하 5만 9천여 명의 한국인이 강제노동을 당한 시설을 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인류보편적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을 보호한다는 세계유산협약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그런 뜻에서 한국 국회가 지난 12일 일본의 강제노역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교적 도발행위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함.
  - 이날 우리 측 입장을 전달받은 바이에른주 지역 보수정당인 기독교사회당(CSU) 소속 코쉬크 회장은 ‘과거 직시와 반성이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취지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독일 정부 담당자와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홍 의원이 전함.
  
- 한일 30일 4년여 만에 국방장관회담…대북공조 논의(05/21,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이 이달 30일 4년여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북 군사정보 공유를 비롯한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데, 양국이 안보 분야 협력을 통해 경색된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됨.
  -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공조 방안과 국방 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 양국 방위정책 관련 사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회담에서는 지난달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절차를 비롯한 민감한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임.
  -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일본 측의 강한 요청에 따른 것임.
  
- 유홍수 주일 대사, “가을 다자회의 계기로 한일정상회담 열릴 것”(05/22, 연합뉴스)
  - 유홍수 주일대사는 일본 나고야(名古屋) 시내에서 행한 강연에서 한일은 “좋은 때도 나쁜 때도 있지만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전제한 뒤 “(올해 가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국간 협의가 있다”며

“그 때는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

- 유 대사는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달 미국 의회 연설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언급하지 않은데 대해 “정권의 역사 인식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귀중한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하면서, 아베 총리가 여름에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 ‘사죄’ 등 무라야마(村山) 담화(전후 70년 담화)의 핵심 3개 단어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함.

■ 일본 전후70년 담화 검토위 좌장, “사죄 불필요”(05/23,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올여름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 내용을 검토 중인 ‘전문가 회의(총리 자문기구)’ 좌장인 니시무로 다이조(西室泰三) 닛폰 유세이(日本郵政) 사장은 “(전후 70년 담화를) 마냥 사죄하는 것을 기조로 하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으로 가야 한다”며 사죄 표현을 담화에 담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힘.
- 비공개로 열린 5차 전문가 회의에서는 ‘한국, 중국과의 전후 화해’ 문제가 논의됐는데, 그는 특히 “(앞으로 회의에서) 과거에 대한 논의만을 할 생각은 없으며 (아베) 총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함.

■ 한일, 2년반만에 재무장관 회의…“정경분리로 협력강화”(05/23,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이 2년6개월만에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정경분리’ 원칙 아래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뜻을 같이 함.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도쿄 미타(三田) 공용회의소에서 자국에서 추진 중인 재정 및 세금제도 개혁과 경제구조 개혁 구상을 공유한 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구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또 저출산 고령화 대응, 기업 보유금의 투자 전환, 신규 벤처기업 육성 등 양국의 과제와 공통 관심사에 대해 상호 벤치마킹하고 협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함.
- 아울러 기재부와 일본 재무성 간의 대화 채널 촉진, 인사 교류 재개 등도 검토키로 하고, 이와 함께 동아시아지역포괄경제파트너십(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함.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日 수산물 수입금지 제소 움직임에 유감표명(05/24,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이 2년1개월 만에 통상장관 회의를 열어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는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본이 최근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산업부는 전함.
  - 그는 또 우리 활어차의 일본 내 운행 및 살아있는 넙치의 대(對) 일본 수출과 관련한 수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이의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일본 측은 이 같은 우리 측 요청을 진지하게 경청했으며, 별다른 이의나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산업부가 회담 분위기를 전함.
  
- **한일, 비정치분야 협력가속(05/24, 연합뉴스)**
  -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안보·경제·문화 등 상호 호혜적 분야와 분리하는 우리 정부의 ‘투트랙’ 기조 유지 속에 최근 들어 상호 호혜적 분야의 교류가 부쩍 강화되고 있음.
  -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오는 30일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29~31일 싱가포르) 계기에 4년여 만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양국 간 국방장관 회담은 처음임.
  -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도 26~27일 서울에서 열리며, 한일 통상장관 회담도 23~24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2년1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알려짐.
  -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하는 등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커지고 있고, 경제 측면에서도 세계경제의 침체·둔화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인데다, 우리 정부로서도 미국이 한미일간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다음 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적어도 비정치 분야에서의 한일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정부, “이코모스 ‘전체역사’ 권고는 징용명시 요구”(05/24, 연합뉴스)**
  - 정부 고위당국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ICOMOS, 이코모스)가 조선인 강제노동(징용)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등재 추진과 관련해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강제노동 사실의 명시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힘.

- 정부는 22일 도쿄에서 처음으로 열린 최종문 외교부 유네스코 협력대표와 신미준(新美潤) 일본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 간의 첫 양자협약에서 이 같은 권고를 바탕으로 일본 측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부는 이코모스의 권고를 ‘무기’로 추가 협의에서 일본 측을 압박하는 한편, 등재 최종 결정권을 가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 기존에 ‘등재냐 아니냐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다’라는 수준에서 설명해오던 우리 정부는 한일간 첫 협의를 기점으로 “등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밝히는 한편, “역사는 기억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음.

■ 日 16개 역사단체, “위안부 강제연행 실증됐다”...왜곡중단 촉구(5/25, 연합뉴스)

- 역사학연구회 등 일본의 16개 역사 연구·교육 관련 단체는 2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일본어와 영어로 발표함.
- 이들 단체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역사학회·역사교육자단체의 성명’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강제연행된 위안부의 존재는 그간의 많은 사료와 연구에 의해서 실증돼 왔다”고 밝히고, 인도네시아 스마랑·중국 산시(山西) 성에서 확인됐으며, 한반도에서 다수의 증언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역지로 데리고 간 사례’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연행 사례가 모두 강제 연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함.
- 이들은 최근 연구에서 피해자가 동원과정뿐만 아니라 위안소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성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것까지 드러났다고 위안부 제도의 반인도성을 지적하고,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사실로부터 눈을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일부 정치가나 미디어가 계속한다면 그것은 일본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발신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음.
- 성명에는 일본역사학협회, 오사카역사학회, 규슈역사과학연구회, 센슈(專修) 대학역사학회, 종합여성사학회, 조선사연구회간사회, 도쿄역사과학연구회, 도쿄가쿠게이(學藝)대학사학회, 나고야역사과학연구회, 일본사연구회, 일본사고구(攷究)회, 일본사상사연구회(교토), 후쿠시마대학사학회, 역사과학협의회, 역사

학연구회, 역사교육자협의회가 참여함.

- 이코모스, “일본 메이지 산업유산 산업혁명 전체 못 보여줘”(5/25, 연합뉴스)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코모스)는 조선인 강제노동(징용)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메이지(明治)산업혁명 유산이 산업혁명의 전체적인 면을 보여주지 못한”고 평가했으나, “비서구권에서 처음으로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일본의 산업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고려하는 게 타당하다”며 등재 권고 결정을 내림.
  - 일본은 메이지 산업 유산 등재 신청서에서 유네스코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기준 가운데 2,3,4번 항목에 해당한다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코모스는 이중 2번 항목인 ‘어떤 기간이나 문화지역 내에서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환’과 4번 항목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뛰어난 건물이거나 건축 또는 기술적 총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그러나 일본의 주장과 달리 3번 항목인 ‘문화 전통이나 문명의 독특하거나 예외적인 증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봄.
  -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려면 6개 항의 문화적 기준, 4개 항의 자연 기준 등 모두 10개 항의 기준 가운데 적어도 1개 항에 부합해야 하는데, 일본 메이지 산업유산은 2개 항을 충족해 등재 권고를 받음.

##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미·중 관계

- 하와이서 한국 등 아태 23개국 상륙부대 회의…중국 제외(05/18, 연합뉴스)
  - 미국 하와이에서 미 해병대와 해군 주최로 아시아태평양 23개국 초청 상륙부대 콘퍼런스가 개최된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는데, 이번 콘퍼런스에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해병대 관계자가 참석함.

- 그러나 분쟁의 당사국이자 아태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네이션 나스타세 해병대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군사훈련을 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법에 따라 중국이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함.

■ 케리 미 국무장관, “중국이 세계 1위 경제대국 되는데 환영”(05/18, 연합뉴스)

- 홍콩 봉황망(鳳凰網)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봉황 위성TV와 인터뷰를 통해 “어떻든지 간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체(경제국)가 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이 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우리는 (중국이 추진 중인)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과 다른 조치(노력)들이 투명하고, 믿을 수 있고, 세계 금융의 준칙을 준수하게 되길 희망한다”는 단서를 달음.
- 이는 중국이 앞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란 점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중국이 기존의 금융질서와 기준에 부합되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됨.

■ AIIB, 담당이사 재량의 ‘신속차관’ 규정 검토(05/19, 연합뉴스)

- 중국은 출범을 목전에 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운영 규정에 수원국 등지에서 실시를 토대로 이사회 승인 없이 담당 이사가 사업현장에서 원조 여부나 지원액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차관 절차(Fast-Track Loan)’ 규정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창립 회원국 정부 대표인 이 관계자는 이번주 싱가포르에서 운영 규정안 등을 놓고 관련국들 간 협의가 있을 예정이며, 현재 차관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문제나 그 한계 및 조건들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함.
-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그동안 이사회가 소규모 또는 저위험성 차관 대출 결정 등에도 수많은 전제 조건을 달거나 옥상옥식 권한으로 간섭하는 바람에 차관집행 지연 등 효율성 저하 비판을 받아왔는데, 세계은행 부총재(2008년)를 지낸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장은 “이런 문제점 개선 차원에서 AIIB 운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함.

- “중국, 태국과 ‘아시안 파나마 운하’ 추진”…중국은 부인(05/19, 연합뉴스)
  - 중국과 태국이 ‘아시아판 파나마 운하’로 일컬어지는 크라 운하 건설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대만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중국 정부는 보도내용을 부인하고 나서 이 계획의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대만 왕보(旺報)는 중국과 태국이 지난 15일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만나 태국 남부 말레이반도의 허리를 관통해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인공 대운하 건설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함.
  - 크라 운하 건설 계획은 과거에도 수차례 추진됐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는데, 크라 운하는 1600년대 후반 처음 구상된 뒤 2004년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태국을 아시아의 에너지 무역 허브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주목받다가 진전 없이 표류해옴.
  - 이 과정에서 해상석유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해 크라 운하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던 중국이 신(新)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를 두고 중국이 경제 효과를 도모하는 목적 외에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 포석을 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그러나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도 매체를 통해 보도를 봤다”면서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이 이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태국 주재 중국대사관도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의 관계당국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 어떤 연구나 구체적인 협력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면서 “이 사안에 대한 그 어떤 입장도 밝힌 적이 없다”고 밝힘.
  
- 리커창 총리, 미국 뒷마당 중남미에 새 협력모델 제안(05/20, 연합뉴스)
  -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중국-브라질 기업인 총회에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나란히 참석해 폐막식 축사를 통해 이른바 ‘3X3’식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고 중국신문사가 보도함.
  - 리 총리는 첫 번째로 라틴아메리카의 수요와 결합시켜 물류, 전력, 정보기술(IT) 등 3대 채널을 공동으로 건설함으로써 남미 대륙의 상호연결 및 소통을 실현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2번째로 “기업, 사회, 정부 3자간 협력방식을 실현하자”면서 “기업이 주도하고 사회가 참여하고 정부가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합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PPP 방식’, 특허경영권 등의 분야에서 프로젝트 협력을 추진하자”고 말했으며, 3번째로 중국-라틴아메리카의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금, 대출, 보험이라는 3대 융자 채널을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중국-라틴아메리카 산업협력 전용기금을 설립해 300억 달러(약 32조 9천억 달러)를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함.

- 리 총리의 첫 번째 제안은 사실상 중국의 신(新)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 육상·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내용이어서 이를 두고 중국이 ‘일대일로’ 참여를 남미에도 간접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4개국을 방문한 데 이어 리커창 총리도 이번에 남미 4개국 방문에 나서는 등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 확대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의 뒷마당 격인 중남미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견제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도 담겼다는 평가가 나옴.

■ 일본 언론, 사드에 관한 중국 반발에 주목(05/20, 연합뉴스)

- 최근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치는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은 중국의 반발에 주목하고 있는데, 교동통신은 사드에 관한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의 서울 용산기지 발언을 전하면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이 자국 감시를 위한 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분석함.
- 교동통신은 또 중국은 한국에 사드를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고 한국은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인 논의에 소극적이라며 한중 관계에 초점을 맞춰 사드 문제를 다룸.
- 산케이(産經)신문은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같은 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강연한 것을 다루며 그가 “중국의 반발 때문에 한국이 망설이는 사드의 한국 배치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함.

■ 美 ‘중국인 산업스파이’ 기소…中, “엄중 우려”(05/20, 연합뉴스)

- 미국 법무부가 자국 기업의 영업 비밀을 훔쳐 중국 정부에 제공한 혐의로 교수 2명 등 중국인 6명을 산업스파이로 기소했는데, 법무부는 중국인 6명이 아바고

테크놀로지, 스카이워크스 솔루션 등 미국의 두 기업에서 박막 음향 공진 소자(FBAR) 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중국에 넘긴 것으로 파악함.

- 미국 법무부에서 국가 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존 칼린 부장관은 “기소된 중국인 6명은 민감한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 기업의 비밀을 중국 정부에 넘겼다”고 설명하고, “산업스파이는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지위를 약화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강조함.
-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정부는 관련 상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양국을 오가는 중국인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중국은 상업기밀을 훔치는 행위를 반대하고 관련 범죄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면서도 “우리도 이번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임.
- 이번 사건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문제를 놓고 미중 양국이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옴.

■ **훗 파이낸셜타임스(FT), “미국, 어설픈 AIB 대응으로 중국과 관계 지나치게 냉각” (05/21, 연합뉴스)**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연내에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냉전적 사고로 AIBB 문제에 접근,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옴.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어설픈 AIBB 전략 (America’s flawed strategy toward AIBB)’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이 AIBB 창립에 적대적인 태도를 견지해 대중 관계만 불필요하게 냉각됐다고 혹평하였는데,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참여를 막아보려 했지만, 영국이 참여를 선언하자 독일, 한국 등 우방들도 뒤를 따름으로써 참담한 패배를 맞았다는 것임.
- FT는 AIBB에 대한 반사적인 적대감은 미국이 중국 저지에만 급급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 있다고 중국이 주장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함.
- 이 신문은 또한 미국에 최선의 방책은 전략적 실수를 자인하고 창립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라는 충고를 덧붙이고, 동맹국 다수가 참여하면 AIIB 내 서방 발언권이 강해지고 중국의 투표권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일본에도 AIIB 불참을 종용하지 말 것을 조언함.

- 日 아사히 신문, “AIIB 설립자본금 애초의 두배로…중국에 거부권 부여 가능성” (05/22, 연합뉴스)
  - 싱가포르에서 20일부터 3일 일정으로 비공개로 열리는 AIIB 수석교섭관 회의에서 AIIB의 설립자본금을 원래 계획했던 500억 달러에서 1천억 달러(약 109조2600억원)로 증액하는 데 57개 창립회원국이 합의했다고 회의 참석자가 21일 밝힘.
  - 중국의 지분은 애초 50% 가까운 수준이 검토됐으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할 것이라는 각국의 우려가 반영돼 25%를 넘는 선으로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하면서, 그러나 출자 비율 변경 등 중요 의제에 관해서는 의결권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상 중국의 거부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함.
- 중국, 미국인 8만명 먹여살린다…간첩 기소에 반발(05/22, 연합뉴스)
  - 미국 법무부가 텐진대 교수 등 중국인 6명을 산업스파이로 기소한 것을 두고 중국이 대미 직접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중국의 포털 텡쉰(騰訊) 등은 미중관계전국위원회와 미국의 리서치회사 로돕이 공동으로 낸 ‘새로운 이웃, 중국의 대외투자연구’ 보고서를 인용, 중국 기업들은 지난 2000년 이후 작년까지 460억달러(50조원)를 미국에 투자해 1천500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하고 8만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대미투자 규모는 2020년까지 1천억~2천억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은 20만~4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그러나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의 대미투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국, 독일, 프랑스, 홍콩, 일본 등에 비해서는 뒤져 있는데, 중국의 대미투자는 외국의 대미 전체 투자 6조3천500억달러의 1%에도 못 미치며, 여기에는 미국이 첨단기술 투자를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미국 법무부가 최근 중국인 6명을 산업스파이로 기소한데 대해

중국 언론들은 또다시 미국내에 중국위협론을 부각시키려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음.

- CNN, “중국 해군이다, 당장 나가라” 남중국해 중-미긴장(05/22, 연합뉴스)
  - “여기는 중국 해군, 여기는 중국 해군. 오해를 피하려면 제발 떠나십시오.” 이 같이 정중하던 중국 해군의 경고 메시지는 ‘우리는 국제공역(international airspace)을 지나고 있을 뿐’이라는 미군의 거듭된 답변에 “여기는 중국 해군... 여기서 나가!”라는 짜증 섞인 반응으로 되돌아옴.
  - CNN에 따르면 이날 P8-A기에 떠날 것을 요구하는 중국 해군의 영어 경고 무전은 8차례나 반복됐고, 초계기 조종사인 마이크 파커 대위는 “중국 해군의 무전은 해안에서 전송된 것이 분명하다”며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용수자오<永暑礁>) 위 인공섬에 지어진 레이더 기지를 가리킴.
  - 중국은 피어리 크로스 암초가 속한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 군도)에서 축구장 1천500개에 해당하는 8.1km<sup>2</sup> 규모의 인공섬들을 짓고 군 막사, 망루, 군용기 활주로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를 가리켜 일각에서는 “중국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부른다고 CNN은 전함.
  - 매트 뉴먼 소령은 “이곳에는 중국 군함과 해안경비대 선박이 수없이 많이 오가고 있다”고 전한 한편, 인공섬 내 군사시설이 늘어날수록 미 정찰기나 함정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더욱 잦아지고 거칠어지고 있음.
  
- 주베트남 미대사, “中 남중국해 행보, 미국-베트남 가깝게 해”(05/22, 연합뉴스)
  - 테드 오시어스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가 21일(현지시간) 하노이의 대사관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행보로 미국과 베트남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말함.
  - 지난해 12월 부임 후 처음으로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한 오시어스 대사는 과거 적대국이었던 미국과 베트남 간에 고위급 대화가 갈수록 활성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긴장을 관리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고 전하고, 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과 관련, “외교적 압력을 통한 방법을 원한다”며 “갈등을 끝내지는 않더라도 충돌은 피할 방법이 많이 있다”고 강조함.

- **높아지는 남중국해 갈등 파고…미·중 대립 격화 일로(05/22, 연합뉴스)**
  - 영유권 분쟁이 치열한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군사작전, 무력충돌 가능성 등의 표현을 써가며 상대국에 경고장을 날리는 등 갈등의 수위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음.
  -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1일 필요하다면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인근 해상에서 군사 작전을 할 수도 있다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고 스티븐 워런 국방부 대변인도 미군이 인공섬 인근의 영해 기준인 12해리 이내로 접근하진 않았지만 “그것이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음.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을 향해 “그 어떤 모험적이고 도발적인 행위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비판의 날’을 더 세우고, 미국 해상초계기가 지난 20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 상공을 정찰한 데 대해서도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며, “중국은 유관 지역에 대해 긴밀한 감시·통제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영유권 수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천명함.
  - 남중국해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의 앞마당이고 미국으로선 필리핀 등 동맹국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적용되는 핵심 해역이며, 미국 주도의 기존 역내 질서의 재편을 시도하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 간의 치열한 경쟁과 패권 다툼이 벌어지는 무대이기도 함.
  
- **중국계 미국인 물리학자, 첨단기술 유출혐의 피소(05/23, 연합뉴스)**
  - 중국 톈진대학 교수 등 중국인 6명을 산업스파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한 지 사흘 뒤인 18일(현지시간)에, 펜실베이니아 주 연방대배심은 고온 초전도체를 연구하던 중국계 미국인 물리학자가 자신의 기술을 중국 측에 유출한 혐의로 필라델피아 소재 템플 대학 물리학부의 시샤오싱(47) 교수를 기소함.
  - 미국 검찰이 시 교수를 기소하면서 “시 교수가 중국인 박사후 연구원을 동원해 중국 내 제3자를 위해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시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산업스파이가 아닌 4건의 통신사기라는 점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을 첨단기술이나 지적재산권으로 더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의 바탕이 되고 있음.

- 中 언론, “남중국해 도서는 중국땅’ 표기 옛 미국지도 발견”(5/25, 연합뉴스)
  - 치열한 영유권 분쟁이 전개되고 있는 남중국해의 일부 도서지역이 중국땅임을 보여주는 미국의 옛 지도가 발견됐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25일 캐나다 ‘명보(明報)’를 인용해 보도함.
  - 이 매체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밴쿠버의 노점에서 판매된 옛 지리사전에서 20세기 중반의 남중국해 상황을 묘사한 지도가 발견됐는데, 1947년 제작된 ‘콜리어스 월드 아틀라스 앤 가제티어(Collier’s World Atlas and Gazetteer)’라는 이름의 이 지리 사전에는 미국 지도제작회사인 랜드 맥널리(Rand McNally)가 제작한 ‘Popular Map of China, French Indochina, Siam, and Korea’라는 지도가 삽입돼 있었음.
  - 명보는 이 지도가 적지않은 남중국해 도서지역을 중국땅으로 표기했으며, 특히 분쟁도서 지역인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호양사, 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에 대해서는 ‘차이나(China)’라는 표기를 붙여놨다고 설명하고, 이 지도제작업체가 만든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영사군도) 관련 지도에서는 ‘필리핀’이라는 표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함.
  
- 중국, 남중국해 문제 놓고 연일 미국 강력비판(5/25,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개입의 수위를 높이는 미국을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는데,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군의 남중국해 분쟁 도서에 대한 감시·정찰 활동에 대해 “미국 군용기의 중국 도서에 대한 저공 정찰 활동은 오관과 해상·공중에서의 의외의 사건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함.
  - 화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 측의 도발행위에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면서 “이미 미국 측에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히고, “중국의 국가주권과 영토안정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반석처럼 단단하다”면서 “우리는 미국 측에 잘못을 고치고 이성을 유지함으로써 무책임한 언행을 일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함.
  - 신문은 “미국이 중국을 가르치려는 거만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충돌은 매우 피하기 어렵고 중국 군대는 존엄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경고의 수위를 높임.

## 바. 미·일 관계

- 미 국방부, “일본 내 오스프리 배치 계획 변경없다”(05/19, 연합뉴스)
  -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본토에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를 배치하는 계획을 하와이에서 발생한 착륙 사고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18일(현지시간) 밝힘.
  - 워런 대변인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아직 불명확하다면서 오스프리의 기술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이고, 이와 관련해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통상 이런 종류의 사고 조사는 수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이번 사고 조사 역시 정해진 기한은 없다고 말함.
  - 미 해병대의 MV22 오스프리는 현재 오키나와(沖繩)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에 24대가 배치돼 있으며 미 국방부는 2021년까지 일본 본토에도 MV22의 공군용 모델인 CV22 오스프리 10대를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지만, 계속된 안전성 논란에 이번 사고까지 겹치면서 일본 내에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임.
- 美 일본군위안부 기림비 1년…“역사에서 탈출할수 없다”(05/22, 연합뉴스)
  - 미국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지난해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에 건립된 일본군위안부 기림비가 1주년을 맞으면서, 워싱턴 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WCCW)는 21일(현지시간)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청사 강당에서 1주년 기념식을 열고 군위안부 피해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가 단순히 한일간의 문제가 아닌 여성과 인권에 대한 보편적 문제임을 재확인함.
  - 기념식 연단에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즉 제국주의 일본이 침략한 국가에서 저지른 만행들을 부인하려는 시도를 날선 어조로 비판하였는데, 데니스 헬핀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노예제도든 군위안부 성노예 피해든 과거의 잘못된 일로부터 탈출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고, 미국 하원의 지한파 의원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의원은 “최근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정부에서 역사를 다시 쓰려는 경향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과거사문제 해결이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이날 기념식에는 마크 김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등 미국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정치인들 뿐 아니라 중국계인 수전 리 메릴랜드 주 상원의원도 참석했다.

- 일본 오키나와 지사, 미국 방문해 ‘아베 미군기지론’에 반박(05/22, 연합뉴스)
  - 미군기지 문제로 아베 정권의 미일 안보동맹 강화 구상에 반기를 들어온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지사가 이달말 미국을 찾아 미군기지 반대 메시지를 전할 예정임.
  - 오나가 지사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군기지를 지으려 땅을 빼앗고서는 기지가 낡았다며 새 땅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군은 오키나와에서 ‘강도’처럼 행동한다고 주장함.
  - 오나가 지사는 “미국에서 미국이 야기한 모순에 대해 얘기하고 싶고 아울러 현 상황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고 싶다”고 밝혔는데,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말 미국 방문을 전후해 헤노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반박성 방문 성격이 짙음.
  
- 일본정부, 미국서 지일파 연구자 학습 모임 발족(05/22,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미국과 자국의 관계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른바 지일파(知日派) 학자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소장·중견 학자가 참여하는 학습 모임을 미국에서 발족함.
  - 주미 일본대사관은 아시아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소장·중견 학자를 워싱턴의 대사관저로 초청해 21일(현지시간) 첫 모임을 열었는데, 모임은 학자와 연방의회 직원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21일 첫 행사에는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앤드루 오로스 워싱턴대 준교수 등 9명이 참석함.
  - 지일파 학자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주미 일본대사관의 무관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정부는 자국에 호의적인 전문가 그룹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은 물론 동남아 등지에서도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있음.
  
- 주미일본대사관 배포 추정 ‘일본해 합리화’ 편지 발견(05/24, 연합뉴스)
  - 주미 일본 대사관이 동해의 일본해 표기를 합리화하고자 미국 대학이나 기관을 상대로 ‘학술 외교’를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책과 편지가 발견됐는데,

국제지도수집가 협회 한국대표인 김태진 티메카코리아 대표에 따르면 김 대표는 미국 뉴욕의 유명 헌책방인 스트랜드 서점에서 주미 일본 대사관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편지 1장이 든 서적을 우연히 발견함.

- 문제의 책은 일본 데이쿄(帝京) 대학이 발간한 ‘지명의 기원과 기능-일본해 지명의 연구’로, 동해의 일본해 표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연구가 담겨 있는데 여러 고지도에 표기된 ‘일본해’를 소개하며 일본해의 정통성을 우기거나 ‘동해’라는 명칭은 한국, 중국, 일본 나라마다 동쪽이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 책은 모두 137쪽으로 영어와 일본어가 병기돼 있으며,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책 속에 끼여 있던 편지인데, 2010년 10월 26일 보낸 이 편지의 발신인은 주미일본대사관 시게키 다키자키 수석 공보관, 수신인은 조지타운대 아서 알렉산더 일본경제연구소장으로 돼 있으며, 편지에서 발신인은 “귀하가 관심을 가질만한 책 1권을 동봉한다”며 이 책을 소개하고, 이어 “이 책이 귀하 기관의 연구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 귀하가 책과 관련해 우리와 공유하고 싶은 논평이나 반응을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덧붙임.

■ ‘美전쟁 안 휘말린다’ 아베 주장에 일본인 73% ‘납득불가’(5/25,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강행처리하려 하는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해 일본 여론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니혼게이지아이신문(닛케이)과 TV도쿄가 22~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안보법률 제·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대해 반대가 55%, 찬성이 25%로 각각 집계되었으며, 안보법제 제·개정안에 담긴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가 44%로, 찬성(41%)보다 많았고, ‘안보법제 정비로 일본이 미국의 전쟁에 휘말릴 일은 전혀 없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로, ‘납득된다’(15%)는 응답을 압도함.
- 마이니치 신문이 23~24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안보법률 제·개정에 대해 반대가 53%로 찬성(34%)을 웃돌았고, 또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려는 아베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54%, 찬성 32%로 나타남.
-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자위대의 해외활동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제 정비에 대해 아베 정권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여론의 신중론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셈임.

## 사. 미·러 관계

- 미·러 ‘북극 어업협정’ 조인할듯…‘북극해 각축전’ 해빙조짐(5/21, 연합뉴스)
  - 북극해의 영유권을 놓고 북극해에 면한 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5개국들이 치열할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일부 해빙 조짐이 나타났다고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함.
  - 미국지질조사국(USGS)의 추정에 따르면 북극권엔 화석연료만 해도 지구상의 미발견 석유의 13%, 천연가스의 30% 등 온갖 자원이 얼음 속에 갇혀 있으며, 로모노소프 해령(海嶺)을 덮고 있던 억겁의 얼음층이 지난 1975년부터 2012년 사이에 65%나 녹아 없어짐으로써, 이 자원의 보고에 눈독 들이는 5개국이 자국 대륙붕의 연장론을 근거로 피아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깃발꽂기 경쟁을 벌이고 있음.
  - 미국과 러시아, 노르웨이, 캐나다, 덴마크 5개국은 지난해 2월 얼음층이 녹아 새로 형성된 북극해 주변 어장을 대상으로 트롤어업 등을 규제하자는 협정을 추진했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 반도를 병합하는 바람에 조인에 이르지 못했으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주 러시아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직후 러시아 정부는 북극해를 둘러싼 어업협정에 조인할 방침이라고 밝힘.
- 러시아, 서방언론 ‘반푸틴 여론몰이’ 비난(5/23, 연합뉴스)
  - 러시아가 서방언론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론몰이를 계속한다고 주장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비서실) 실장은 현지 뉴스 전문채널 ‘러시아 투데이(RT)’와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간 미국과 영국 신문들이 앞장서서 불신을 조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바노프는 “이는 미국인과 러시아인들에게 푸틴 대통령과 그의 정권이 잘못됐다는 불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며 “이런 여론몰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언론의 반(反) 푸틴 여론몰이가

시작됐다며 서방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단은 러시아가 아니다. 러시아는 단지 사태 발생 후 그에 따른 대응을 한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난함.

- 대통령 비서실이 서방 언론들의 보도에 불만을 드러낸 것은 서방의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저유가와 서방 제재 등으로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러시아는 최근 국제유가가 오름세에 접어들며 당장에 급한 불은 꺾지만, 계속되는 제재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

## 아. 중·일 관계

### ■ 중일 방위당국, 신경전 외중에 국장급 대화(5/18,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은 도쿄에서 방위 당국 국장급 협의를 열어 일본의 집단 자위권 법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는데, 일본 방위성 구로에 데쓰로(黒江哲郎) 방위정책국장은 이날 방위성 청사에서 중국 국방부 외사 관공실 관여우페이(關友飛) 주임과 만난 자리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담은 안보법제 정비안에 대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이해를 구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일본의 안보 분야 동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힌 뒤 “지역의 안정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견제의 뜻을 피력함.
- 양측은 또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해상 연락 메커니즘을 조기에 운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함.
- 중국과 일본이 방위당국 국장급 협의를 갖기는 2013년 4월 이후 2년여 만임.

### ■ 중국-일본, 아시아 신흥국 투자 경쟁 ‘후끈’(5/20, 연합뉴스)

- 세계 금융시장에 따르면 일본은 아시아 신흥국에 1천억 달러(약 109조원)를 투입해 도로, 교량, 철도 등 인프라 건설에 나설 계획이며, 일본 지지통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번 주 중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민간-공공 협력 5개년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일본의 이번 투자는 아시아 신흥국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되는데, 중국은 신(新)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추진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로 주변국들의 환심을

사고 있음.

- 최근 중국이 파키스탄,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에 ‘통 큰 투자’를 약속하자 일본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일본은 특히 수십 년에 걸쳐 공을 들여온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에서 중국의 무서운 성장을 경계함.

■ 일본 ‘히로시마 방문 제안’ NPT 문서서 결국 제외(5/22, 연합뉴스)

- 전후 70년을 맞아 각국 지도자에게 원폭 투하도시인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 방문을 권하자는 일본의 제안이 ‘과거사 물타기’ 논란 끝에 핵확산금지조약(NPT) 합의문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 교도통신 등은 일본 정부가 내놓은 히로시마·나가사키 방문 제안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NPT 평가회의 최종문서 검토안에 한 차례 실렸다가 중국의 반대 등으로 삭제된 후 회의 폐막을 하루 앞둔 21일(현지시간)까지 되살아나지 못했지만, 대신 ‘핵무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나 지역사회’와의 교류나 경험을 공유하자고 촉구하는 내용이 문서 내용에 대한 막바지 교섭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도함.

■ 중·일 아시아 인프라투자 주도권 다툼 가열(5/23,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에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미국과 함께, 현재까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자본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오히려 지난 21일 향후 5년간 공적자금을 활용한 아시아지역 인프라 투자를 현재 수준에서 약 30% 늘려 약 1천100억 달러(약 12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힘.
- 중국신문망은 일본의 이같은 인프라투자 계획은 중국이 주도하는 AIIB의 자본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AIIB와 경쟁을 하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중국도 이에 질세라 지난 20~2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5차 AIIB 수석교섭관 회의에서 AIIB의 설립자본금을 원래 계획했던 500억 달러에서 1천억 달러로 증액키로 함.

■ 시진핑 주석, 일본 관광교류 방중단 만나…‘아베담화’ 견제(5/24,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중일 관광·문화 교류 추진차 중국을

방문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자민당 총무회장을 만났으며, 니카이 회장은 시 주석에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중일 양국 언론들이 보도함.

- 시 주석은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일본 관광교류 방중단 환영식 인사말에서 중일 간의 현안인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올해는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즘 전쟁승리 70주년”이라고 전제하고,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의 죄행을 감추고 역사의 진상을 왜곡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베 총리가 올여름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를 견제함.
- 그는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중국인과 아시아 피해국민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정의와 양심이 있는 일본인들 역시 동의할 수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한 한편, “일본 인민 역시 당시 전쟁의 피해자”라며 침략 역사를 왜곡·미화하는 일본 우익세력과 평범한 일본인들 전체와의 차별화도 시도함.
- 이에 대해 약 3천명 규모의 방중단을 이끌고 중국에 온 니카이 회장은 시 주석이 말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며 그 실현을 위해 우리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함.
- 시 주석의 이날 환영 만찬 참석은 자민당 내 친중파인 니카이 회장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모습을 취하면서 동시에 아베 총리의 전후70년 담화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니카이 회장에게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지적함.

■ 시진핑 주석, “이웃국은 선택할 수 없다”(5/25,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과거사 역주행에 ‘견제구’를 날리는 동시에 적극적인 ‘중일우호’ 메시지를 발신함.
- 시 주석은 “중일 교류는 2천 년을 이어왔다”고 말하고, “이웃은 선택할 수 있어도 이웃국가는 결코 선택할 수 없다. 중국은 중일관계의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며 “중일관계가 어떤 역사적 풍파를 거쳤어도 이런 기본 방침은 시종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그런 중일 간 현안인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는데, 시 주석은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을 언급하며 “중일 양국민이 덕으로서 진정한 친구가 될 때 세대로 계승되는 우호관계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함.

- 시 주석이 양국의 유례 깊은 역사적 교류를 강조하는 동시에 일본의 역사인식을 비판한 것은 평범한 일본인들 전체와 침략 역사를 왜곡·미화하는 일본 우익세력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됨.
- 중국 '일본군 위안부 문서' 국가급 기록유산 승격(5/25, 연합뉴스)
  - 중국 국가기록국은 최근 29건의 문서·문헌을 제4차 중국 기록문헌 유산으로 공포하면서 이 중 중앙기록관 등 9개 기록관이 함께 신청한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문서'를 국가급 기록문헌 유산으로 승격시킴.
  - 이는 일본군의 반인권적 침탈행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수치스러운 역사도 후대를 위한 증언으로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특히 일본 우익세력이 위안부의 역사적 진상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중국 내 9개 기록관이 전국적인 힘을 모아 일본의 만행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이 주목됨.
  - 일본군 위안부 문서는 1937년 12월부터 1938년 상반기까지 일본군이 난징(南京)을 강점하고 사유재산을 징발해 사용한 데 따른 민원 및 재산피해 기록 중 위안부에 관한 내용만 골라낸 것으로, 10권 이상의 기록 자료는 예컨대 난징 4-129번지 건물이 전쟁기간 일본군의 위안소로 사용된 점, 일본군의 패배 직전 위안소가 해산된 점, 위안소 관리를 위탁받아 실행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자신의 건물이 위안소로 사용되면서 받은 재산상의 손실,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이 가정집과 여관을 점거해 위안소로 사용한 정황,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 등 시민들의 신고 내용이 포함됨.

## 자. 중·러 관계

- 중·러, 실탄사격 끝으로 첫 지중해 연합훈련 마무리(5/22, 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는 21일(현지시간) 실탄사격등을 끝으로 지중해에서 처음 실시한 11일 일정의 연합군사훈련을 모두 마쳤는데, 관영 신화망(新華網)은 이날 오전부터 양국 해군 함정들이 해상에서 가상 목표를 향해 실탄, 대포, 로켓 등을 발사하며 합동 훈련을 벌였다고 보도함.
  - 러시아의 순양함 모스크바함을 비롯해 호위함, 상륙함과 중국군의 호위함

웨이팡 (유<물수변+維>坊)함과 린이(臨沂)함 등이 이번 실탄사격 훈련에 투입되었으며, 중국 해군이 지중해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신화망은 전함.

- 중국 함정 편대 지휘관은 “이번 훈련은 양국 해군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전면적 전략 협력동반자 관계의 높은 수준을 과시했다”면서 “해상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양국 군대의 능력도 증명했다”고 밝힘.
- 러시아와 중국이 각국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지중해에서 실탄까지 발사하며 연합훈련을 한 것은 국제안보 상황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며, 구체적으로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꺾끄러운 미국, 유럽 등 서방을 향해, 중국은 해상 영유권과 역사 문제 등으로 낮을 밝히는 미국, 일본 등에 각각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도 제기됨.

#### 차. 일·러 관계

- 러시아 외무장관, “일본만이 2차대전 결과에 의문제기”(5/20, 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일본이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하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 “2차대전 결과에 유일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나라”라며 일본을 비판함.
  - 라브로프 장관은 “일본인에게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인정하느냐고 물으면 ‘체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이 문제(쿠릴 4개섬 문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온다”고 소개함.
- 방일 러시아 하원의장, 우크라 관련 “대러 제재 해제해야”(5/21, 연합뉴스)
  - 일본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하원 의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러시아 제재를 일본이 “계속하면 할수록 러-일 관계에 미치는 손해는 커진다”며 제재 해제를 요구함.
- 푸틴 대통령 방일, 美日 신밀월에 걸림돌 되나…제동거는 미국(5/22, 연합뉴스)
  - 일본은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대상인 쿠릴 4개섬 반환을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에 지금은 러시아와 정상적 관계를 유지할 적절한 때가 아니란 점을 얘기해왔다”며 러-일 정상회담에 반대 입장을 밝힘.

- 미국 측은 지난달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푸틴 대통령의 연내 일본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때도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짐.
- 당초 지난해 하반기로 잡혔던 푸틴의 일본 방문 계획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 제재에 일본이 동참하면서 무산됐지만, 일본은 이후로도 푸틴 초청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2015년 적절한 시기’에 푸틴의 일본 방문을 성사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 함.
- 또한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을 조만간 러시아로 보내 푸틴 대통령의 방일 문제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이 러-일 정상회담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푸틴의 방일 문제가 미-일 간 외교 마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 Ⅲ. 북한 인권 동향

####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국제 기정의 날 “북한, 가부장적 병폐 심각”(5/19, 미국의소리)
  - 북한의 여성들은 장마당을 통해 북한 경제와 가정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면서도 엄청난 차별과 박해를 계속 받고 있다고 전함.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사회 모든 분야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음.
  -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여성폭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탈북민 출신으로 유럽에서 북한여성들의 인권개선운동을 펼치고 있는 박지현 북한인권유럽연합(EAHRNK) 간사는 북한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음.
  - 북한 여성들은 외부 세계에 나온 뒤에야 자신들의 인권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 깨닫는다고 말했음.
  -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대외적으로 여성과 어린이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당국의 이런 주장을 신뢰하는 나라들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북한 여성들이 세계 다른 지역의 여성들처럼 당국의 차별과 박해에 집단으로 시위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상황임.
  - 유엔이 우려를 나타낸 자녀들의 권리문제 역시 북한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임.
  - 유엔은 영양 부족으로 아동들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지방에는 가난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고 함.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013년에 천명한 ‘인권 우선’(Rights Up Front) 정책에 따라 유엔 기구들이 심각한 인권 유린국들에 대해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함.
  - 유니세프 등 여러 기구들이 유엔 인권기구들과 협력해 북한 여성의 경제 역할에 따른 지위 향상과 아동권리 보호, 부모의 역할 균등을 북한에 촉구할 필요가 있음.

- “북 고위간부 처형, 대북지원과 관련”(5/2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 매년 수백만 달러씩 지원하며 대북 사업의 큰손으로 불리던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산드라 서씨는 북한에 입북했다가 2주간 억류된 뒤 지난 4월 9일 추방됐음.
  - 당시 대북 지원사업을 하던 사업가들은 대북 사업의 대모라 불리며 북한 관계자들과 친밀함을 과시하던 서씨의 억류에 이은 추방에 큰 충격을 받았음.
  - 역시 북한 지원에 앞장서 왔던 캐나다의 임현수 목사는 아직 억류 상태이지만 자세한 상황이 알려지지 않아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음.
  - 임목사 역시 대북 지원사업에 큰 손으로 주로 어린이 지원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을 뿐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에 연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 사업가들은 큰 충격을 받았음.
  - 그동안 북한을 드나들며 고아원 지원사업, 건물 신축사업, 식량보급이나 의약품 전달 등 정치와 상관없이 인도적인 사업을 하던 이들의 억류 사태는, 대북사업을 하던 경제인들과 대북 선교사업을 하던 교회를 크게 움츠러들게 했음.
  - 대북 사업들도 모두 북한의 고위 간부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대북지원 사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의 감시와 통제가 심해지다 보니 북한 내 간부와 대북사업을 하던 외부 인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 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임.
  - 처형되거나 눈 밖에 난 간부들과 친밀한 관계였던 대북 사업가들도 덩달아 억류돼 조사를 받거나 더 이상 대북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주장임.
  - 한 대북지원 사업가는 정치와 전혀 상관이 없고,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이었던 만큼 사업가들에게까지 공포정치를 확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하루빨리 억류된 사업가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말했음.
  
- 마원춘 일가, 산간오지로 추방(5/2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이 지난해 12월 5일 양강도 풍서군 신명리에 추방됐다고 여러 현지 소식통들이 확인했음.
  - 추방 된지 한 달이 지나도록 현지주민들은 추방된 당사자가 마원춘인 줄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했음.
  - 마원춘의 협동농장 추방소식은 지난해 12월 말 양강도의 한 소식통이 “중앙에서 매우 높은 간부가 풍서군 신명리로 추방돼 왔다”고 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음.

- 당시 소식통은 추방된 가족들이 탈곡장 경비실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는데, 탈곡장 경비실은 종자건조실과 붙어있는 작은 건물로 12월 4일 갑자기 군인들이 몰려와 높이 1.5m의 울타리를 하루 사이에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은 그곳에 군 간부들이 임시 거주하는 줄 알았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 다음날인 12월 5일 군인들이 울타리를 친 경비실 건물에 인민보안부 호송차에 실린 마원춘 부부가 도착했는데 짐이라곤 보따리 두 개 정도였다고 하며, 이후 12월 15일 경에 해외유학중이던 아들과 장모, 처남 2명이 또 실려 왔다고 그는 덧붙였다.
  - 마원춘 가족이 추방된 양강도 풍서군은 열차도 없는 산간오지인데 그 중 신명리는 풍서읍에서도 130리 떨어져 있는데다 교육시설도 마을에서 30리 떨어진 '무하 중학교'가 전부라고 전했다.
  - 더욱이 주변은 해발 2천여미터의 백세봉에 둘러막혀 빠져 나갈 곳도 없다며 이들은 지금까지 마을 담당보위원과 무하분주소 보안원(경찰)들의 엄격한 감시를 받으며 신명협동농장 각 작업반들에 분산되어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북한, 반 총장 '인권·미사일' 발언 등 문제 삼아 강경 반응(5/20, 경향신문)
- 북한이 20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개성 방문 허가를 전격 취소하고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력 강화 조치에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의 내용을 담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 북한이 국제기구 수장과의 약속을 배경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핵 자위력’을 내세워 한반도 긴장지수를 끌어올리려는 배경에 관심이 쏠림.
  - 반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연설에서 “오늘 새벽 북측이 갑작스럽게 외교 경로를 통해 저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 당초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임금 인상 갈등 등 팽 막힌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이로써 난망해졌다.
  - 북한은 또 이날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의 핵 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다중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며 중단거리 로켓은 물론 장거리 로켓의 정밀화, 지능화도 최상의 명중 확률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라며 위협을 가했다.
  - 북한이 이처럼 의도적인 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반

총장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등의 최근 발언에 크게 자극받은 것 같다고 지적했음.

- 반 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이런 것들이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말했음.
- 북한이 대결적 분위기를 이어나가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국제 사회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현 단계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면 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北, 케리 국무장관 비난…“더 아프게 자극하겠다”(5/21, 조선일보)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거절한 북한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북핵 위협 관련 발언을 맹비난했음.
- 북한이 연일 강경대응을 이어나가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줄을 잇고 있음.
- 미국의 대북압박에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임.
- 미국의 현 정부가 북한을 더 압박할 생각이라면 북한도 미 정부를 압박할 능력과 수단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음.
- 칼에는 장검으로, 총에는 대포로 풍비박산 내는 것이 북한 군대와 인민의 기질이라고 위협했음.
- 앞서 방한한 케리 장관은 지난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과 인권 문제를 비판하면서 국제사회가 더욱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음.

■ 북한, 연일 대남 비방전…“공포정치 운운은 도발”(5/22, 연합뉴스)

- 북한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문제’, ‘공포정치’ 등을 운운하는 것은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극한 표현을 동원해 인신공격성 비방과 중상을 이어갔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민족의 재앙거리, 북남 관계개선의 암덩어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괴뢰 집권자가 그 누구의 인권 문제를 운운하며 공포정치니 뭐니 하고 악담을 늘어놓는 것은 천추에 용납 못 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음.
- 북한은 이어 ‘민족의 수치’, ‘재앙거리’, ‘암덩어리’ 등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원색적인 비방과 중상에 나섰다.

- 신문은 “비단보자기로 저들의 인권 실태를 가리워보려고 해도 시궁창의 구정물에서 풍기는 악취가 어디 가겠냐”며 “그 주제에 감히 누구의 ‘인권’ 문제를 입에 올리었으니 세상을 웃기는 정치만화가 아닐 수 없다”고 비꼬았음.
- 북한은 또 “병진노선을 관철하는 것에 자위력 강화의 길이 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와 존엄, 통일과 번영이 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 남한 정부의 비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음.
- 신문은 “(지금)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할 엄숙한 시각”이라며 “괴뢰집권자는 자신의 행실을 심각히 돌이켜봐야 한다”고 역설했음.

■ 북, 농촌동원으로 장마당 시간 단축(5/2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밥 숟가락 들 힘만 있는 사람이면 모든 주민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야 한다는 농촌동원이 5월 초순 일제히 시작되면서 북한의 장마당 개장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소식임.
- 최근 평안북도 주민소식통은 “농촌 동원 기간 장마당 개장시간은 대도시의 경우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고 소도시 및 군소재지 장마당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조정되었다”고 밝혔음.
- 평산시 장마당 개장시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들어 장마당이라기 보다는 반짝(벼룩)시장처럼 변한 것임.
- 소식통은 “해마다 농촌동원이 시작되면 장마당을 거의 폐쇄하다시피 해서 장마당 장사로 생계를 꾸려가는 서민들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 소식통은 또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모내기, 김매기가 끝나는 7월 중순까지 농촌동원이 이어지며 이 기간에는 달리기 장사꾼들도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장마당의 소규모 장사꾼들이 물건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 북한의 농촌동원이 시작되면 중국 변경지역의 무역상인들도 북한 대방들로부터 주문이 거의 끊겨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밖에도 농촌동원 기간에는 북한 행정기관의 업무도 거의 정지되다시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평안북도의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한 소식통은 “농촌동원 기간에는 공무원들 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행정기관의 각 부서에는 한 명씩만 남아서

사무실을 지키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 2. 북한 인권

- 케리 미 국무 “압박 높여 북한 행동 변화시켜야”(5/18, 한국경제)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중국과 대북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 케리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뒤 연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안보 대화에서 대북제재 조치를 구체적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 말했다.
  - 그는 “중국은 무역, 경제 제재 등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통해 북한에 압력을 가해왔다”며 “미국도 보조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런 목적으로 한국에 와서 회의하고 있다”고 전하며 대북 추가 제재 가능성을 보였다.
  -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한 케리 장관은 이날 북한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 그는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실험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이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매우 도발적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여러 악행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하고, 압력을 더욱 가중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한·미는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케리 장관은 “북한이 지금의 행태를 이어간다면 유엔 안보리의 감시가 강화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 “‘위민크로스DMZ’, 北에 인권·핵 문제 해결 촉구해야”(5/18, 데일리NK)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8일 북한민주화위원회와 국민통일방송 등과 함께 북한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거쳐 남한으로 내려오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

위민크로스DMZ(WCD)에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할 것을 촉구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음.

-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 의원은 “지난주 토요일 WCD에 참여하는 리마보위 여사와 글로리아 스타이넘 여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면서 “평양에서 세미나를 갖게 되면 북한 내의 정치범수용소 문제와 유엔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 내용을 (북한 당국이) 이행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 이어 하 의원은 “최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사례 등 북한의 야만적이고 잔인한 공개처형 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냈다”면서 “아울러 한국으로 오게 되면 탈북단체와 북한인권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국민통일방송과 탈북단체들은 ‘위민크로스DMZ, 평화의 이름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외면하지 말아요’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평화의 메시지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묻히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음.

■ “유럽 대학생, 북 인권 관심 증가”(5/19,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을 연구하는 독일 튀빙겐대학의 학생단체(UNHSG Tuebingen)가 오는 20일 북한의 인권과 한반도 비무장지대(The Korea Question: Human Rights and the Future of the DMZ)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 이 단체의 맥스 뮐러 언론담당은 튀빙겐대학 이석민 박사의 한반도 분단 역사 배경 설명에 이어 독일의 인권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대표의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강연(Options for European NGOs to improve North Korea’s Human Rights)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행사를 개최하는 튀빙겐대학의 단체는 유엔과 관련한 국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정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법학, 자연과학, 의학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의 모임임.
- 이날 행사에서는 건축가 김동세 씨의 비무장지대 관련 동영상도 소개될 예정임.
-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독일 베를린에서도 전시된 바 있는 이 작품은 지난해 이탈리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에 출품된 남북한 건축 공동전시 ‘한반도

오감도(Crow's Eye View: the Korean Peninsula)'의 일부임.

- 제작에는 건축가, 도시계획가, 사진작가, 화가 등 29개 팀이 참여해 남북한의 건축 100년을 모형, 영상, 그림 등의 자료를 통해 조망한 것으로 평가 받았음.
- 일반적으로 지역 국제 앰네스티 행사에는 중장년층 청중이 많은데 지난 13일 런던에서 서쪽으로 약 180킬로미터 떨어진 글로스터셔 중부 북한인권 행사에 대학생들이 많이 참가하였음.
- 특히 질의응답 시간이 오자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냐는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묻기도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 미 상원의원, 대북추가제재 결의안 발의(5/20, 자유아시아방송)

- 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이 19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음.
-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군사 위협과 인권탄압, 국제 법규 및 협약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북한에 대한 맞춤형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을 미국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음.
- 아울러 결의안은 미국이 엄격한 전제조건이 없이 북한과 양자대화 또는 6자회담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가드너 위원장은 결의안 제출과 관련해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은 실패한 것이 자명하다며, 이 대북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음.
-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은 행정부에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음.
- 이 결의안은 앞으로 상원 외교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원 전체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를 밟게 됨.

■ “러시아 내 북 건설회사, 이탈 노동자 러에 간첩신고”(5/21, 자유아시아방송)

-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건설 노동자 김 모 씨는 5월 중순 현지에서 건설 현장을 이탈해 이른바 ‘탈북’에 나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긴 하지만 흔하진 않다고 말했음.
- 일단 북한에 두고 온 처와 자식들이 자신의 탈북으로 인해 겪어야 할 고초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해외 파견 노동자의 탈북을 막기 위해

- 반드시 이들의 처자식을 북한에 인질로 잡아놓고 있기 때문이라 전함.
-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현지 북한 회사 측에서 작업장을 이탈한 노동자를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에 간첩으로 신고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음.
  - 김 씨의 설명에 따르면 러시아 내 북한 회사에도 ‘부지배인’ 등의 명칭으로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나와 있지만 이들은 직접 이탈 노동자를 체포하러 다니지 않고 일정 기간 기다린다고 전함.
  - 그러다 러시아 정보 당국에 신고하면 이들이 3일 내에 신속히 이탈 노동자를 체포해 온다는 것임.
  - 김 씨는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개별청부생(회사 일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감을 구해 일하는 노동자)’일 경우 러시아 화폐 약 4만 루블, 즉 미화로 800 달러 씩 매달 회사에 반드시 바쳐야 하는 납입금이 너무 많아 항상 빚쟁이 같은 심정으로 살아간다고 말했음.
  - 일감이 없어 납입금을 바치지 못하면 동료 등 여기저기서 돈을 꾸야 하며, 일을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납입금을 바쳐야 하는 특정 날짜가 돌아오면 일감을 준 고용주에게 공사비를 미리 선불로 달라고 애걸해야 한다는 것임.
  - 이들의 생활을 지켜본 현지 한인들은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이란 국가가 외화 획득을 위해 해외로 내보낸 ‘앵벌이’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음.
- 마이클 커피 “유엔, 북한 인권유린에 조치 취할 것”(5/21, 연합뉴스)
- 마이클 커피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21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커피 전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다룬 것은 미안마 이외에 북한이 처음”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협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음.
  - 그는 “최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과 관련한 잔혹한 숙청 방식 등의 보도는 북한이 언제라도 난폭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북한 정권이 주민의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통제하는 보기 드문 전체주의 국가라고 지적했음.
  - 이어 “1990년대에 100만여 명의 북한 주민이 아사할 정도로 심각한 대기근이 있었지만 북한 정권은 엄청난 돈을 핵개발에 쏟아부었다”며 “북한이 핵무기

20여개를 보유하고 미사일과 잠수함을 개발한다면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 커비 전 위원장은 “5개 상임이사국을 모두 포함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카타르 건설사가 해고한 북한 노동자 90명 추방돼(5/22, 연합뉴스)

- 카타르의 유명 건설회사인 CDC에서 일하다 근로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집단 해고된 북한 건설노동자 90명이 카타르에서 추방됐음.
- 카타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해고된 북한 노동자 90명이 지난 14일 30명, 15일 60명 등 두 차례로 나뉘어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 CDC는 카타르 주재 북한 대사관과 회의 등을 거쳐 고용 중인 192명의 북한 노동자 중 90명을 지난 4일부터 해고했음.
- 카타르에서는 ‘카팔라’라는 스폰서십 제도를 통해 현지 고용회사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된 이들은 즉각 추방됨.
- CDC는 노동자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북한 감독관들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에서 보건·안전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카타르 당국자들과 마찰을 빚게 돼 불만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감독관들의 근로규정 위반으로 최근 CDC 작업 현장에서는 북한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태까지 생겼던 것으로 전해졌음.
- CDC는 북한 대사관 측의 요청 등을 고려해 192명 전원을 해고하려다 90명만 해고했으나, 나머지 노동자들도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회사의 보건·안전 규정을 어기면 즉각 해고하겠다고 밝힌 상태임.
- 한편,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카타르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심각한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 카타르에는 15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북한 노동자도 3천여 명 포함돼 있음.

■ 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SLBM 28일 안보리 보고(5/22, 미국의소리)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오는 28일 안보리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문제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제재위원회 관계자가 밝혔음.
  - 이 관계자는 제재위원회가 이번 주 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받았다고 이같이 말했음.
  -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회의에서 북한과 수단 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이라며, 3개월마다 이뤄지는 대북제재위원회의 안보리 보고도 이날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또 다른 유엔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9일 이뤄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사출시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정식으로 검토할 것을 제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말했음.
  -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11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시험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음.
  -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된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지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서 결의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검토하고 안보리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 유엔 北인권사무소 협정 서명...서울설치 법적준비 완료(5/24, 연합뉴스)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위한 협정 서명이 완료된 것으로 24일 전해졌음.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유엔 측은 지난주 관련 협정에 공식 서명했음.
  - 이에 따라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를 위한 공식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됐음.
  - 정부는 협정 서명에 앞서 유엔 측과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협정의 국내 절차도 마무리했음.
  - 이에 따라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한 행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 정부는 다음달 중에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공식 개소한다는 방침임.

### 3. 탈북자

- 북 노동당 간부 출신 탈북자 “공포정치 두려워 탈북”(5/18, KBS TV)
  - 최근 탈북 한 북한 노동당의 하급 간부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포정치가 두려워 탈북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소식통은 노동당 소속 하급 간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탈북을 하여 국내에 들어왔으며,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두려워 탈북을 하였고 많은 당 간부들이 공포정치에 떨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이 탈북자는 대외활동을 하던 노동당 하급 간부로 전해졌음.
  - 정부 소식통은 최근 탈북자들 가운데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두려워 탈북을 했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 최근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당한 간부 70여명의 85% 가량인 60여명은 당 간부 출신이라며 군과 내각 출신에 비해 7배나 많다고 밝힌 바 있음.
  -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현영철 숙청 사실을 밝히면서 북한이 최고위급 간부들은 물론 중앙당 과장과 지방당 비서 등 중간 간부들까지 처형했다고 밝혔다.
  
- 미국 비영리기구, 탈북자 통해 북한 내부 조명 (5/22, 미국의소리)
  - 미국의 비영리기구인 ‘위기 보도에 관한 풀리처센터’가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내부 상황을 조명하는 기획프로그램을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했음.
  - 이 단체는 ‘나는 북한을 탈출했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와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9명을 소개하면서, 이들의 경험을 통해 북한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 소개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중국 동북지방의 안전가옥에 머물고 있는 한 탈북자는 자신이 특권층 가족이었지만 극도의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 신변안전을 위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탈북자는 특히 북한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식사를 거르는 어린이들이 그로 인한 결과를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에 머물고 있는 또 다른 탈북자는 북한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만 잘 살뿐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라리 전쟁이 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 익명으로 증언한 또 다른 중국 내 탈북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북한에서는 먹을 것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항상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했음.
  - 탈북 화가 송벽 씨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려 사망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족들이 굶주리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북한 정권에 붙잡혀 고문을 당한 후 2002년 북한을 탈출했다고 밝혔음.
  - 북한에서 선전일꾼으로 일했던 송 씨는 지금은 전 세계인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그림을 주로 그리고 있음.
  - 폴리처센터는 탈북자들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폐쇄되고 억압적인 사회인 북한의 증인들’이라며, 탈북자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극도의 굶주림과 가혹한 탄압을 당했다고 전했다.
- 탈북여성 “평화운동가들,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 가져달라”(5/25, 여성신문)
- 탈북자인 이애란 사단법인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원장이 국제여성평화건기에 참가한 세계여성평화운동가들에게 “탈북자들과 함께 북한 가족에게 전달할 쌀을 전달하자”고 제안했음.
  -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5 국제여성평화회의’는 전날 열린 WCD 대표단과 여성평화운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 문제와 세계 분쟁 지역에서의 평화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음.
  -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맥과이어와 리마 보위, 코드핑크 공동창립자인 조디 에반스가 단상에 올라 ‘각국에서 갈등과 분쟁을 끝내기 위해 여성을 조직한 경험 나누기’에 대해 발표했다.
  -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자신을 탈북한지 18년 된 탈북 여성이라고 소개한 이씨는 “북한에 남편을 남겨둔 채 생후 4개월된 아들을 데리고 탈북했다. 외삼촌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한지에서 몸이 얼어 돌아가셨다. 대부분의 탈북 여성들은 식량을 구하러 중국에 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한다”며 탈북자들의 힘겨운 삶을 소개했음.
  - 이어 그는 “북한의 김정은과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에게 탈북자들이 구입한 쌀을 북한의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김정은은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WCD는 북한을 다녀왔다”로 토론했음.
  -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살릴 힘이 없어서”라며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우리가 구입한 쌀을 싣고 비무장지대(DMZ)를 건너 북한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음.

#### 4. 이산가족

- 정부, 이산가족 영상편지·유전자 검사 사업 등에 100억 지원(5/19, 뉴시스)
  - 정부가 19일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과 유전자 검사 등에 약 100억 원을 지원키로 했음.
  - 정부는 18일 제27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 장관)를 열어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등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음.
  - 남북 간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우리 측 고령 이산가족 1만 명의 영상편지를 제작함.
  - 대한적십자사에 20억1600만원이 지원되며, 영상편지 제작비가 19억6200만원, 매체 발송료가 4000만원, 조달수수료가 1400만원임.
  - 이산가족의 사후(死後)에도 남북 이산가족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측 고령 이산가족 1만 명의 유전자를 검사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9억 7400만원을 지원하며 유전자 검사비가 9억6400만원, 조달수수료가 1000만 원임.
  - 북한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의 필수 백신·필수 의약품 지원 사업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영양식 지원 사업에 모두 610만 달러(약 66억 원)를 지원함.
  - 유니세프에 400만 달러 (백신 130만 달러, 의약품 195만 달러 등), 세계 식량 계획에 210만 달러(영양강화 식품 130만 달러, 수송 18만 달러 등)를 제공함.
  - 북한 장애인 지원 사업에는 총 10억 원을 지원하는데, 치료재활물품·영양식·영양제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시설 개선 등을 위해 국내민간단체와 국제기구·국제 비정부기구 등에 10억 원이 제공됨.
  - 통일부는 “이번 의결로 이산가족과 북한 장애인·영유아·산모의 인도적 상황이 개선되고 남북 간에 실질적 협력의 통로가 개설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北, 이산가족상봉 문제 南에 책임 전가 北적십자중앙회 대변인, “박근혜 ‘상봉재개를 촉구한다’고 수작질” 비난(5/21, 데일리NK)
  -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한국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동족끼리 오갈 수 있는 길부터 터놓는 것이 박근혜 패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 북한 적십자회중앙위원회는 2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는 ‘고령의 이산가족고통’이니,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에게 ‘이산가족 상봉재개를 촉구한다’고 수작질을 했다”며 지난 19일 박 대통령이 ‘아시안리더십 콘퍼런스’에 참석하여 이산가족 상봉재개를 촉구한 것에 대해 비난했음.
  - 이어 대변인은 “상봉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그 무엇을 할 것처럼 입방아질만 하고 북남사이의 모든 접촉과 왕래의 길을 가로막으면서도 그 누구의 ‘책임있는 조치’를 운운하며 대결 분위기를 더욱 악랄하게 고취하고 있다”고 강변했음.
  - 대변인은 최근 ‘80세 이상 고령이산가족 성묘방문단 방북추진위원회’를 구성, 민간차원의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일천 만 이산가족위원회’를 “인간쓰레기 단체”라고 비난하며 한국이 “단체들과 보수언론들을 내몰아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이 실현되지 못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듯이 떠들어대며 내외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편,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지난해 2월 제19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마지막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이 5·24조치 해제를 이산가족상봉 논의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진척되지 못하고 있음.

## 5. 남북자

- 특이사항 없음.

## 6. 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 7. 대북지원

- 유엔 “결핵으로 매년 北주민 2천500명 사망” 유엔, ‘2015 대북 인도지원 관련 보고서’ 발표…결핵 치료 시스템 붕괴(5/20, 데일리NK)
  - 유엔이 “북한 주민 2천5백여 명이 매년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유엔은 최근 발표한 ‘2015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결핵이 북한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주요 과제”라며 이같이 전했다.
  - 보고서는 특히 다제내성 결핵(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 북한에서 매년 3천9백여 명의 다제내성 결핵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고, 지역 주민들에게 결핵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서를 통해 지적하였다.
  - 다제내성 결핵이란 기존의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약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만성 결핵을 말하며, 북한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문제임.
  - 보고서는 특히 환자를 돌보는 여성들과 아이들의 결핵 전염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 결핵 환자의 결핵균은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서 타인에게 전파되어 결핵균을 감염시킬 수 있는데, 면역력이 약한 여성들과 아이들의 2차 감염이 우려된다는 것임.
  - 앞서, 탈북의료인 출신인 조수아씨는 최근 국민통일방송을 통해서 낙후적인 의료설비를 가진 북한의 의료실태를 지적하며, 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북한 내부의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됐다고 밝힌 바 있음.
- 미 NGO “북한 보건 관계자들에 B형 간염 예방접종”(5/22, 미국의소리)
  -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관계자 5명이 북한에서 보건 관계자들에게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 이 단체의 테리 스미스 국장은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결핵실험실 전문가 1명 등 5명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지원하는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관계자들에게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스미스 국장에 따르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북한에서 B형 간염접종을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예방접종약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로부터 지원 받았음.
- 유니세프는 앞서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에 B형 간염 예방접종 백신 2천 명분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이번 방북 기간 중 북한 국립결핵연구소 실험실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연구원들에게 결핵 예방과 진단, 치료법도 교육 할 예정임.
- 또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지원한 식량과 의약품, 수도설비 등의 지원 물품이 잘 전달됐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스미스 국장은 말했다.
- 스미스 국장은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후원자 8 명이 추가로 오는 26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들은 이 단체가 지원하는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을 방문하여 지원 물품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임.
- 한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앞으로 두 컨테이너 분량의 식료품 등을 추가로 북한에 보낼 예정이라고 스미스 국장은 말했다.
- 지원품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선적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는 설명임.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미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 블랙마운틴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로 매년 약 10차례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 담요 등 지원품을 보내고 있으며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도 지원하고 있음.

## 8. 북한동향

- 미국 사회의 인권유린·인종차별행위 및 '반테러전'을 거론하며 "미국의 인권유린행위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비난(5.19, 중앙통신·노동신문/피고석에 끌어내야 할 인권범죄자)

- 【北赤중앙위 대변인 담화(5.20)】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및 인도적 지원 발언 관련 ‘위선의 극치, 철면피한 여론기만’이라며 ‘인도주의라는 말을 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동족끼리 오갈 수 있는 길부터 터놓는 것이 박OO패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5.21, 중앙통신)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5.20)】 존 케리 미국무장관의 ‘북핵 및 인권문제’ 발언 관련 “비참한 처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남을 물어뜯는데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우리를 자극할수록 미국을 더 아프게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위협(5.20,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여성들과 국제여성대행진에 참가할 대표단(위민크로스DMZ) 성원들의 상봉모임, 5월 21일 채춘희(「여맹」 부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5.21, 중앙통신·중앙방송)
  - \* 세계 여러 나라 여성들의 국제평화토론회, 5월 21일 채춘희(「여맹」 부위원장)·국제여성대행진 참가할 대표단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5.21, 중앙통신)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